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가계동향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 관련 지표 작성

2026. 3.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가계동향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 관련 지표 작성

변준석 · 송정현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향 및 내용	2
제2장 선행 연구 및 해외사례	4
1. 선행 연구	4
2. 해외 사례	7
제3장 소비조사 및 소비지표의 의의	9
1. 가계동향조사	9
2. 소비지표의 개념 및 의의	13
제4장 주요 소비지표 작성 방안	17
1. 자료 및 기초분석	17
2. 분배지수	22
3. 엥겔계수	28
4. 슈바베계수	35
5. 재별 지출 비중	44
6. 기타 지표	4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6

요 약

개인 또는 가계의 경제적 후생은 소득에 기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통해 실현된다. 소득은 후생을 위한 기반이자 중간 과정이며, 소비는 후생이 드러나는 최종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계의 경제상황과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공식 지표는 주로 소득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소비 관련 지표의 필요성과 의의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소비지표의 구체적인 작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소득·소비·자산의 관계를 정리하고, 소득지표와 소비지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이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분배지표(소비 지니계수, 소비 팔마비율, 소비 5분위 배율), 앵겔계수(협의·광의), 슈바베계수, 재벌 지출 비중, 적자가구 비율 등 대표적 소비지표를 시범 작성하였다. 특히 분배지표의 경우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이 매우 높은 상관성과 설명력을 보이는 반면, 5분위 배율은 양극화 지표로서의 해석이 더 적절함을 보였다.

앵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미시적 방법(가구별 비율 후 평균)과 거시적 방법(총액 비율)으로 작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두 방법 간 결과 차이와 해석상의 유의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외식비, 의제주거비 등 최근 소비구조 변화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계수 작성 시 어떤 항목을 포함·제외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내구재·준내구재·서비스 지출 비중, 보건·교육비, 방송·시청각 콘텐츠 이용, 운동시설·반려동물 관련 지출 등 구조 변화·소비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지표는 소득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계의 실질 생활수준과 구조 변화, 취약계층의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보여준다. 향후 분배·복지 정책 수립과 평가에서 소득지표와 소비지표를 병행하는 이중 축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비지표 작성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용어 : 소비지표의 의의, 팔마비율, 앵겔계수, 슈바베계수, 내구재 비중, 소비트렌드 변화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개인과 가계는 근로 제공이나 사업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이를 소비·저축·투자에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달성함
 - 가계소득은 가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자원이며, 소비활동은 의식주와 같은 필수재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문화·건강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
 - 결국 가계의 경제적 후생은 소득 수준뿐 아니라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소비하는지에 의해 규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경제성과에 대한 분배 상태를 파악할 때는 소득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 소득 측정은 비교적 용이하고, 세제·사회보험·이전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 지표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지니계수 등은 가계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통계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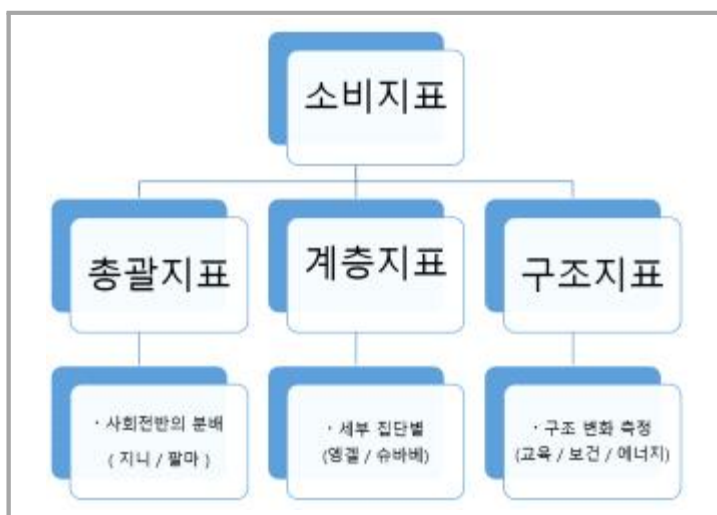
- 그러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위험을 회피하는 가계는 자본시장과 가계금융을 활용하여 소득의 단기 변동을 완충하고,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소비 흐름을 평탄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신용카드, 가계대출 등 금융 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고, 반대로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현재 시점의 소득 분포는 현재 복지 분포와 괴리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우리 사회는 과거 필수소비재 중심 구조에서 교육·문화·의료·여가 등 재량소비재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
 -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주거·보건·에너지 비용 부담 확대, 반려동물·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는 소득지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가계의 실제 생활 수준과 부담 구조, 정책 효과를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소비 측면의 정보가 필수적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소비 관련 지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는 소득지표와 소비지표의 이론적·실증적 장단점을 비교
 - 주요 소비 분배지표와 생활형 소비지표(엔겔계수, 슈바베계수 등)의 작성 방법을 정교화
 - 내구재·서비스 비중, 보건·교육비, 새로운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하는 구조 변화 지표를 발굴
 - 이를 통하여 향후 정책·통계 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소비지표의 틀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방향 및 내용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



<그림 1-1> 소비지표 연구 계층구조

□ 첫째, 총괄지표(분배지표)

- 가구 전체의 소비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 지니계수, 소비 팔마비율, 소비 5분위 배율을 작성하고, 각각의 지표가 갖는 이론적 성격과 장단점, 상호 연관성을 분석
- 특히 팔마비율이 지니계수와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

□ 둘째, 계층지표(생활비 부담 지표)

- 소득분위·가구유형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앵겔계수(협의·광의)와 슈바베계수를 중점적으로 다룸
- 미시적 작성 방식(가구별 비율의 평균)과 거시적 작성 방식(총액 비율)을 비교
- 건강보조식품·외식비·의제주거비 등 포함 범위에 따라 계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

□ 셋째, 구조 변화·소비트렌드 지표

- 가계 소비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재별(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 지출 비중과 자동차 등 대표 내구재 지출을 검토함
- 또한 보건·교육비, 연료비, 방송·시청각 콘텐츠, 운동시설, 반려동물 관련 지출 등을 분석하고, 적자가구 비율 등 거시경제·복지 관련 지표도 함께 검토

□ 이하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 우선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소득·소비·자산 통합 프레임워크와 소비지표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정리
- 이어 3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조사체계와 분류 개편,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소득·소비·처분가능소득의 분포와 추이를 통해 최근 가계 경제 상황을 개관
- 제4장에서는 소비 분배지표, 앵겔·슈바베계수, 재별 지출 비중, 기타 소비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비교하고, 작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통계·해석상의 쟁점을 정리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소비지표 도입·확대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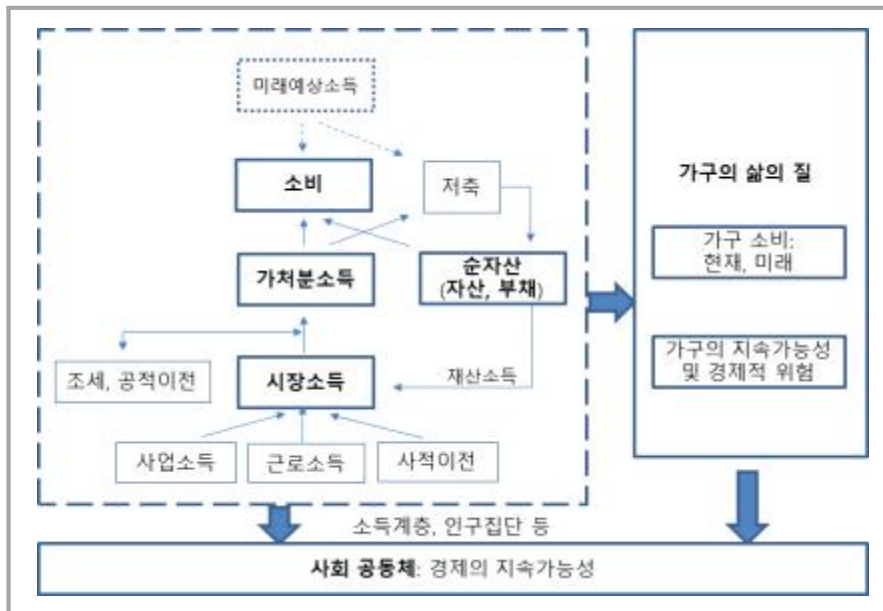
제 2 장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1. 선행 연구

□ 소득·소비·자산 통합 관점의 연구 흐름

- 기존 분배연구는 주로 소득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와 자산을 포함한 다차원적 분배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됨
-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 2017)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뿐 아니라 소비·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가계동향조사 및 자산조사 자료의 연계를 통한 분석 방안을 제안함
- 자산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는 미래 예상 소득과 순자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함
- 소비는 소득과 달리 생활 수준의 실질적 분포를 파악하는 지표로 소득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실제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지표로 파악 가능



<그림 2-1> 소득·소비·자산 프레임워크

□ 소득·소비 불평등 비교 연구

- 김대일(2007)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소득과 소비에 기초한 지니계수를 비교
- 비교 결과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대략 0.29 수준, 소비 기준 지니계수는 약 0.27 수준으로, 소비 분포가 소득 분포보다 더 평등함을 보임
- 소득에는 일시적 요인이 포함되지만, 소비는 생애·장기 관점의 후생을 더 잘 반영한다는 해석을 제시
- 또한 시계열 관점에서 소득·소비 지니계수의 변화 양상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소득지표만으로는 복지 불평등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김대일(2015)은 1990~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소득·소비 불평등의 장기 추세를 비교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비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소비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아지는 구조 변화가 나타남
-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득·소비 지니계수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010년대에는 다시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양상
- 소득·소비 간 괴리, 완충 메커니즘(저축·차입·정부이전 등)을 함께 봐야 분배구조를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

□ 소비지표 체계 및 분배지표 연구

- 변준석 등(2017)은 소득분배 분석에서 지니계수 외에 팔마비율(Palma ratio), 5분위 배율 등 다양한 분배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
- 팔마비율은 상위 10%와 하위 40% 소득비로 정의되며, 지니계수에 비해 양극화(꼬리 부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재정학회(2024)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기반 소비지표 개선을 위해 다음 세 축의 지표 체계를 제안함
 - (1) 삶의 질과 소비: 소비의 기본구조, 특정항목 과지출 가구, 취약계층 소비
 - (2) 지속가능한 사회와 소비: 소비 불평등, 과부담 가구(적자가구 비중)
 - (3) 소비행태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기술·문화 트렌드 등

□ 본 연구와의 연계

- 선행 연구는 소득지표 중심 분배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비·자산을 포함하는

통합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앵겔·슈바베계수 등 대체/보완 지표를 검토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계동향조사에 실제 적용 가능한 소비 분배지표·생활비 지표(앵겔·슈바베계수)·구조변화 지표 등의 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둠

□ 가계경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소비지표까지 검토한 사례는 한국재정학회(2004)에서 수행한 가계동향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들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소비지출 지표체계 구성안을 마련하고, 가계동향조사 조사 특성과 항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표개선 방안을 마련함

<표 2-1> 소비지출 지표체계 구성안별 통계표·지표 개선방향

레벨1	레벨2	주요 통계표 및 지표 개선방향
1. 삶의 질과 소비	소비의 기본구조	· 연령대 구간 세분화: 5개 → 7개 또는 9개 · 교육정도 구간 세분화: 3개 → 5개 · 소비구간별, 소득구간별 통계표 삭제
	특정 소비항목에 대한 과지출 비중 가구 파악	· 앵겔계수(협의, 광의) 생성 · 슈바베계수 생성
	취약계층의 소비	· 공공부조 수급을 기준으로 세분화 - 1단계(수급 여부), 2단계(공공부조 유형-대분류) - 3단계(공공부조 유형-소분류): 10개 · 실업 여부를 기준으로 2단계 세분화 - 1단계(가구주 실업 여부): 2개 - 2단계(장·단기 실업): 2개
2. 지속 가능한 사회와 소비	소비 불평등	· 신규 분류기준 - 소비 5분위 배율별 - 소비 10분위 배율 · 신규 지표 - 소비기준의 지니계수
	과부담 가구의 비중	· 신규 지표 - 적자가구 비율
3. 소비 행태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 가구분류 기준의 세분화 - 고령 가구주 여부별 가구구성 세분화: 29개 * 가구원수 × 가구유형 × 고령 가구주 여부 - 자녀 연령대별 가구구성 세분화: 54개 * 가구원수 × 가구유형 × 자녀 연령대
	새로운 기술 및 문화적 트렌드	· 신규 분류기준 - 구입처를 기준으로 2단계 세분화 · 1단계(온라인 vs 현장): 2개 · 2단계(구체적 구입처): 4개(온라인) + 5개(현장) · 신규 지표 - 4개 유형(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의 재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 소비지출 체계에서는 ①삶의 질과 소비 ②지속가능한 사회와 소비 ③소비행태의 변화의 3가지 카테고리 구성
- 이러한 프레임워크 하에서 앞의 <표 2-2>와 같은 구체적 소비지표를 제안

2. 해외 사례

- OECD는 소득·소비·저축을 함께 보는 분배지표(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각국의 가계 소득·소비·저축 분포를 동시에 추정
 - 우선 국민계정의 가계 소득·소비·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가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맞춰 정렬. 그 후 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은 보정·추계한 뒤, 소득 5분위(또는 가구유형)별로 소득·소비를 재분배해서 소득·소비 불평등 정도(최고분위/최저분위 비율 등)를 함께 산출
 - 기존에는 지니계수 등 소득 분배지표만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소득 분포와 소비 분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얼마나 다른지 공식적인 모니터링 가능
 - 특히 분위별 소비 수준·소비 대비 소득 비율·저축률까지 같이 보면서 소득 충격이 소비·저축에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 Eurostat에서는 소득 - 소비 - 자산의 공동분포(joint distribution) 실험통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 개별 가구 단위로 소득·소비·자산의 공동분포를 만들려고 노력
 - 여러 자료를 통계적 매칭으로 합쳐서, 가구별 소득 - 소비 - 자산 조합을 복원하고, 소득·소비 모두 하위 분위에 있는 가구, 소득은 낮지만 소비·자산은 높은 가구 등을 식별
 - 소득·소비·자산의 공동분포는 물질적 복지와 경제적 취약성을 더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것은 단순한 소득 불평등 작업만으로는 불가능함에 기인
 - 아울러 Eurostat에서는 Household Budget Survey(HBS)에서 소득 5분위별 소비구조(주거·식료품·교통 비중 등)의 정기적 공표를 통해 소비패턴의 분배적 차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EVS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표본 조사로, 소득 계층별 상세한 소비 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
- LWR (Laufende Wirtschaftsrechnungen):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조사로, 시계열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EVS만큼 상세한 조사는 아님. LWR 기반으로, 월 가구 순소득 구간별로 월평균 소비총액(€), 12대 COICOP 항목별 소비액을 제시

□ 해외 사례의 시사점

- OECD·Eurostat·독일 사례 모두 소득·소비·자산을 결합한 분배지표, 소득분위별 소비 수준·구조, 소비·저축의 조정을 함께 보는 접근을 채택
- 이는 한국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소득·소비를 동시에 관측하고, 소득지표를 보완하는 소비지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제 3 장

소비조사 및 소비지표의 의의

1. 가계동향조사

1.1 조사목적 및 주요 연혁

-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
 -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의 기초자료 제공
 - 소득 수준 측정 및 소득 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가계수지 및 가구의 후생 수준 분석,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 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 결정 등의 정책적 기준 제공

-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가계조사’를 시작으로 조사가구 확대 등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대상 확대
 - 2003년에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로 조사대상 확대
 - 2006년에는 전자가계부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비농림어가’로 조사대상 확대
 - 2019년에는 2017년 지출부문과 소득부문 통계로 이원화된 조사의 소득-지출 부문을 통합하였으며, 월 7,200가구 전용 표본을 구축.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농림어가 까지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전체가구’로 포괄범위를 확대

1.2 조사항목

가계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 가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자본투자의 대가, 타 가구나 경제 주체로부터 경상적 이전 및 기타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 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음

<표 3-1> 소득항목 분류

구분	대분류		
가계 소득	경상 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보너스 등)
		사업소득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지출(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 등)을 차감한 금액
		주택 등 임대소득	토지 이외 주택, 건물 및 기계장비 임대료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재산소득, 토지임대소득 등)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니라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가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
		공적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사적	사적 가구간 이전, 할인 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등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경조소득, 퇴직수당, 만기 이전에 사고로 보험탄 금액, 실비보험 탄 금액 등)	
기타 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 증가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지출항목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

- 소비지출 항목은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입 대가로 지출한 것으로 구성
- 비소비지출 항목은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등과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과 가구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지출로 구성

<표 3-2> 지출항목 분류

구분	대분류	분류내용
가계 지출	식료품·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보조식품, 식품가공서비스
	주류·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수도· 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운송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우편서비스
	정보통신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 방송 및 시청각콘텐츠 이용, 기타영상 및 정보관련 서비스
	오락·문화	오락문화내구재, 악기,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 및 원예용품,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화훼 및 반려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등,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 및 국외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가계 지출	음식·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보험, 기타 금융,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복지시설, 기타서비스
비소비 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기타 지출		자산 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 이전으로 인한 지출

□ 가계동향조사 관련 자료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 사용

-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에서 소비지출 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소득 - 비소비지출)을 의미
-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을 의미

- 후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을 의미
- 후자율은 처분가능소득에서 후자액이 차지하는 비율(후자액/처분가능소득)×100)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0)

1.3. 기타 등 주요사항

□ 소비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된 COICOP 2018(UNSD) 및 COICOP-K 2019(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를 고려하여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5년 항목 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편(보도자료, 2025)

<표 3-3> 세분류 명칭 변경 및 일부 항목 세분화(인가용)

현행(구)		개편(신)	
중분류	세분류-항목	중분류	세분류-항목
보건	의약품 ∴ 인삼 영양보조제	⇒ 식료품·비주류음료	건강보조식품 신설 인삼 영양보조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 식품관련서비스		⇒ 식품가공서비스 신설 식품가공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 교통·운송	우편서비스 이동 우편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기타영상음향기기	⇒	영상음향기기 이동 텔레비전 기타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기기	⇒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 이동 정보처리기기 기록용 매체
	기록매체 기록용매체	⇒	정보통신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이용 신설 시청각 콘텐츠 및 스트리밍①
	영상음향 및 정보처리기기 수리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	
	문화서비스 ∴ 방송수신료	⇒	방송수신료 기타 영상 및 정보관련 서비스 일반 소프트웨어② 영상음향 및 정보처리기기 서비스 기타 정보서비스
	콘텐츠 ①~⑤	⇒	오락·문화 악기, 음반 및 비디오물 음반 및 비디오물③ 게임, 장난감 및 취미용품 게임소프트웨어 ④
	사진광학장비 사진 및 광학장비	⇒	오락·문화 서적 기타전자서적⑤
	오락문화 내구재 오락 및 운동내구재	⇒	오락문화 내구재 사진 및 광학장비 오락 및 운동내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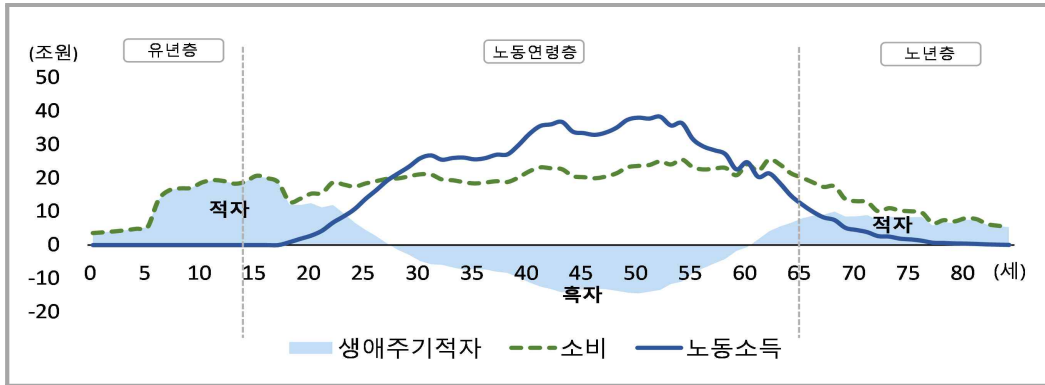
- 단순 대분류로 분류되던 12대 비목을 대분류 ‘소비지출’, 중분류 ‘12대 비목’으로 총화하였으며, 기존의 중분류를 세분류로 명칭 변경
 - 중분류에서는 07.교통을 07.교통·운송으로, 08.통신을 08.정보통신으로 명칭 변경
 - 세분류 명칭 변경 및 인가용에서의 일부 세분화 항목은 앞의 <표 3-3>과 같음
- 가계동향조사는 총화 2단 집락추출방법을 이용하고, 6-6-6 연동표본체계를 갖추고 있음
- 총화2단 집락추출방법
 - 1단계(조사구) : 27개의 균형변수와 Cube method를 이용하여 균형표본추출을 실시한 후, 상호 동질성을 가지는 6그룹으로 분할
 - 2단계(가구) : 표본조사구 내에서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조사구당 8가구 선정
 - 6-6-6 연동표본체계
 - 조사대상 가구는 6개월 동안 조사를 참여한 뒤 6개월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며, 그다음 6개월 동안 다시 조사에 참여
 - 각 그룹(조사구 단위)은 1, 3, 5, 7, 9, 11월에 진입하며 조사구 내 선정된 8가구는 1구역(4가구), 2구역(4가구)로 나누어 교체되어 매월 전체 표본의 1/12이 교체

2. 소비지표의 개념 및 의의

2.1 경제적 효용함수의 정의

- 미시경제학에서 효용함수는 기본적으로 소비(consumption)와 여가(leisure)로 정의
- 소득(income)은 소비와 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변수’일 뿐, 후생 그 자체는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분배·빈곤 연구에서는 측정의 용이성 때문에 소득 지표가 중심
-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위험을 회피하는 가계는 자본시장(저축·차입)을 활용해 일시적 소득 변동

- 을 완화하여 생애 전체에 걸쳐 소비 흐름을 평탄화(smoothing)하려는 경향을 가짐
- 이 경우 단기적 소득충격은 소비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되고, 현재 소비수준은 현재 소득보다는 ‘항상소득(생애 기대소득)’과 더 밀접하게 연관됨



<그림 3-1> 생애주기적자 총액(국민이전계정)

- 시사점
 - 현재 소득 분포와 현재 복지(welfare) 분포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복지·분배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지표와 함께 소비지표 병행 필요

2.2 소득자료의 장단점

- 소득자료는 세제·사회보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행정자료와 표본조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장기간의 일관된 시계열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생산·분배 구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임금, 자영업소득, 자산소득 등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자본시장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
 - 또한 OECD, LIS 등에서 표준화된 소득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벤치마킹에 유리
- 소득자료는 일시적 실업, 사업부진, 보너스 등 일시적(temporary) 요인이 많이 포함된다는 단점을 가짐. 이런 변동은 실제 복지수준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가계는 저축·차입, 자산 매각, 가족·정부 이전 등으로 소득 충격을 흡수. 소득지표만 보면 이러한 완충 메커니즘 및 정책효과(예: 기초연금, 실업급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즉 소비·자산·이전의 조정 효과를 의도하지 않게 무시
- 효용이 소비와 여가로 정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은 복지의 간접 지표에 불과할 수 있음
- 동일한 소득이라도 자산 상태, 가구 구성, 건강 상태, 지역 가격수준에 따라 실제 소비 가능 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소득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함

2.3 소비자료의 장단점

- 복지 불평등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지표는 일반적으로 소비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소득에는 일시적 요인이 많이 포함되지만,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 불평등이 보다 항상적인 복지 불평등에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함
 - 1990년대 한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소비 불평등은 완화되는 구간이 존재하며, 이후 2003년 전후부터는 두 지표가 다시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남(김대일, 2007). 이와 같은 괴리는 대출 제약, 예비적 저축, 사회보장제도 변화 등 소득 충격의 성격과 완충 기제의 작동 여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 동일한 명목 지출이라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점포와 품목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 이러한 가격 이질성과 소비구성 차이를 고려하면, 지출 데이터 기반의 소비지표가 실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더 잘 포착
 - 식품 쿠폰·주거보조·의료보장 등 현물 및 바우처형 등의 이전은 소득보다 소비를 더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므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소비지표가 핵심적 역할 가능
- 지출조사는 세세한 지출항목을 이유로 응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지출 항목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
 - 내구재나 자가주거비 서비스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내구재의 경우 실제 구매시점의 지출과 실제 소비(서비스 흐름)가 어긋나며, 자가주택의 경우 귀속임대료(imputed rent)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비수준 측정이 달라짐
 - 이는 가계동향조사 기반의 소비지표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

2.4 소비지표의 필요성

- 소득 분배 변화의 실질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소비 분배지표가 필요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이 일시적 요인 증가라면 소비·복지 불평등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한국의 1990년대 사례에서 소득·소비 불평등의 방향이 상반되게 움직인 바 있음
 - 반대로 소득과 소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예를 들어 동시에 확대될 경우, 이는 항상소득(구조적 요인)의 불평등 심화로 해석 가능
 - 더 나아가 충격의 성격(일시적 vs. 영구적)과 완충 메커니즘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 소득과 소비의 동행 여부는 충격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그리고 저축·차입·보험·정부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필요
 -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만 증가하고 소비 불평등은 안정적이라면, 소득 충격에 대한 보험·저축 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정책지표 확장을 위해서도 소비 분배지표가 필요.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동일 가구에 대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음
 - 이 점은 소득지표(지니계수, 팔마비율, 5분위 배율 등)와 병행하여 소비 분배지표, 앵겔계수, 재별·항목별 소비격차 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됨
 - 특히 고령화·주거비 부담·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의 불평등은 소득지표만으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 기반 소비지표가 필수적

- 가계 소비지표는 단순히 소득지표의 대체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적·필수적 역할을 수행
 - 항상소득가설이 어느 정도 성립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소비 분포는 소득 분포보다 가계의 장기적 생활 수준과 복지 격차를 더 잘 반영
 - 소득 지니계수·팔마비율 등 소득 기반 분배지표가 보여주는 변화를 소비지표와 함께 읽어야, 그것이 일시적 충격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정책이 어느 정도 완충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
 - 식품·주거·교육·의료·에너지 등 필수 소비지출의 격차와 주거형태·가구구조별 소비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타겟팅 정책의 설계 가능
 - 이전·조세·규제정책의 효과가 실제 소비수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적해, 정책 효과성 평가의 근거로 제공 가능

제 4 장

주요 소비지표 작성 방안

본 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소비 관련 지표를 작성. 먼저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소비 지니계수 등 주요 소비 관련 지표에 대하여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실제 지수를 작성 비교

1. 자료 및 기초분석

1.1 자료 개요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분기별 가계동향자료¹⁾임. 동일한 자료원을 가지고 있으나 RAS를 통한 인가용 자료와 MDIS 추출용 자료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함
 - 표본크기 : 330,164건(12개 연도 48개 분기, 분기평균 6,878건)
 - 인가용 자료는 지출항목이 구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분류-중분류(12대 비목)-세분류-항목 체계에서 항목 단위까지 활용 가능. 항목 단위에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등 재별 분류가 가능함

<표 4-1> 분기별 표본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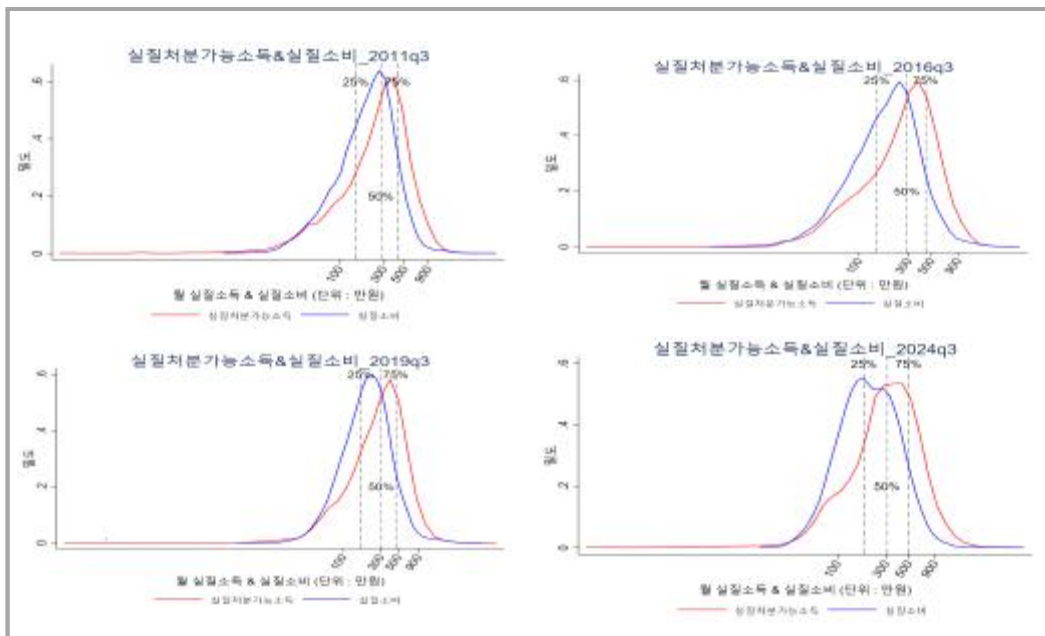
11q1	11q2	11q3	11q4	12q1	12q2	12q3	12q4	13q1	13q2	13q3	13q4
7732	7347	7745	8019	7599	7156	7540	7865	7523	7081	7434	7608
14q1	14q2	14q3	14q4	15q1	15q2	15q3	15q4	16q1	16q2	16q3	16q4
7168	6831	7248	7535	7158	6801	7037	7323	6956	6601	7058	6678
19q1	19q2	19q3	19q4	20q1	20q2	20q3	20q4	21q1	21q2	21q3	21q4
4451	4386	5989	6058	6123	6326	6360	6558	6436	6508	6484	6551
22q1	22q2	22q3	22q4	23q1	23q2	23q3	23q4	24q1	24q2	24q3	24q4
6552	6672	6734	6689	6756	6846	6936	7130	7104	7120	7139	7213

1) 가계동향의 공표주기는 분기. 2017, 2018년은 표본크기나 조사기간, 조사방식, 조사표 등이 다른 기간과 다르고 공표주기도 연간으로 다른 기간과 달라 연구범위에서 제외

- 추출용 자료는 '25년 개편을 반영한 신분류(2019년 이후)로 되어 있으면서 세분류 단위까지만 활용 가능

1.2 기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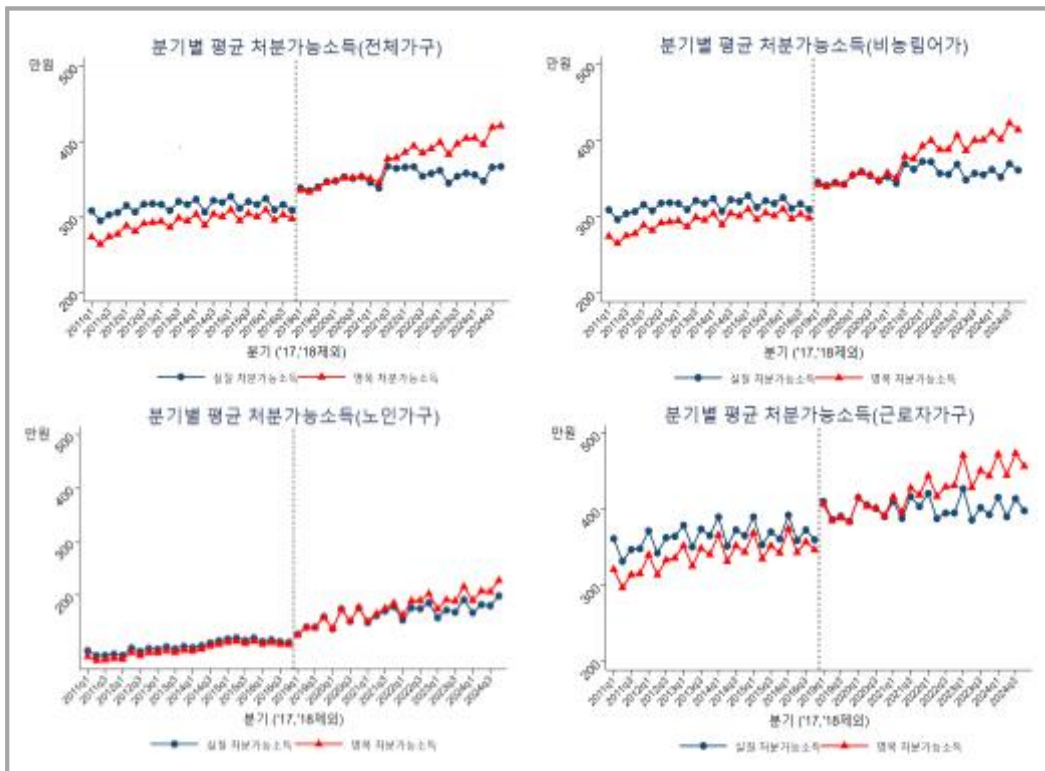
- 주요 소비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가계경제 기초분석을 위한 실질처분가능소득과 실질소비²⁾를 살펴봄. 이를 통해 대략적인 가계 경제 상태의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임
- 2011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함. 2019년 이후 실질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이 30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
- 모든 기간에 걸쳐 실질소득의 폭이 실질소비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 즉 좌측에서 곡률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 이는 기초연금 같은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는 다른 연도와 달리 중위값 인근이 두터움. 또한 소득에 있어서 좌측 곡률의 변화가 다른 연도보다 뚜렷함을 알 수 있음
- 각 분기별 소득, 소비의 분포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득, 지출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음



<그림 4-1> 연도별 실질처분가능소득과 실질소비 분포

2) 2020년 기준으로 실질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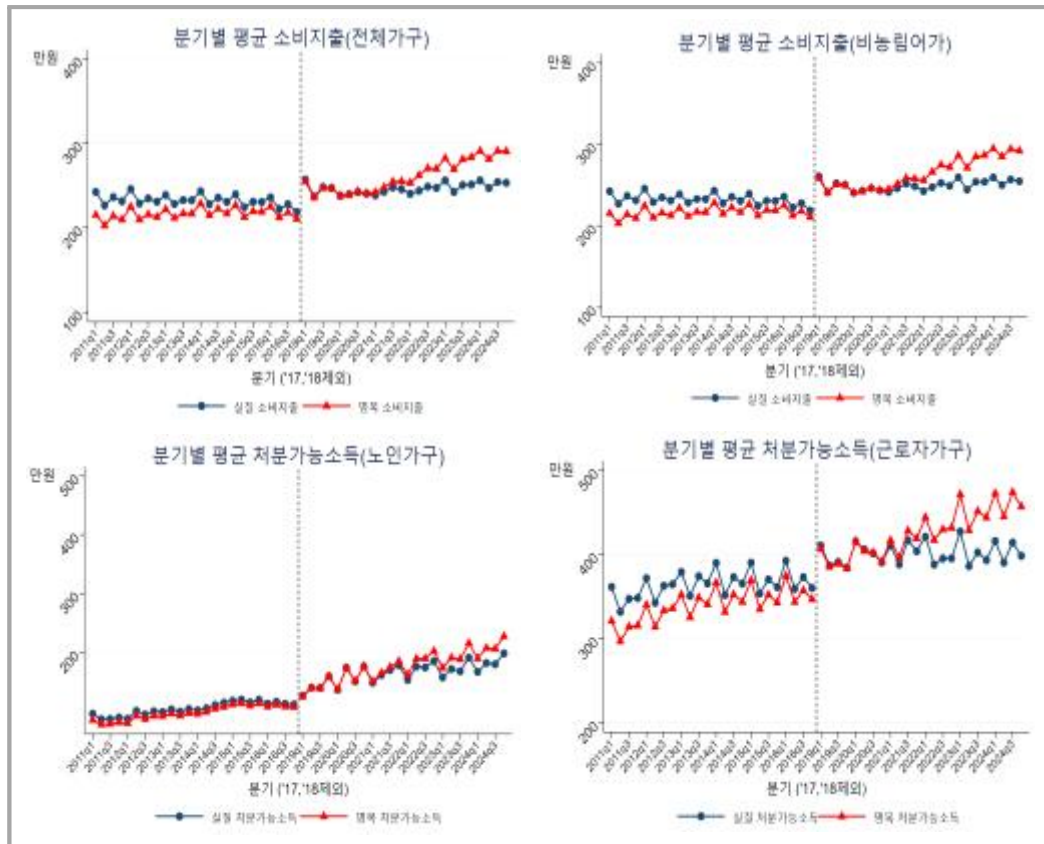
- 분기별 명목소득은 2011년 이후 등락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질소득은 2010년대 300만 원 초반, 2020년대는 300만 원 중반대에 머물고 있음. 2020년대는 물가 상승 효과로 실질과 명목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가계동향조사는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2019년부터 비농림어가를 포함하여 포괄범위를 넓힘. 이에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농림어가를 제외하고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을 산출하였으나 평균값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
 - 노인가구3)의 실질 및 명목 소득은 일반가구 평균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명목과 실질 소득 모두에서 전체 가구 평균값과 달리 지속 상승
 - 근로자가구4)의 경우의 실질 및 명목 소득에 있어서 전체가구보다 높은 모습을 보임. 실질소득 기준으로 2020년대에는 평균 400만 원 내외를 보이고 있음. 다만 명목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못함



<그림 4-2> 가구 유형별 명목 및 실질 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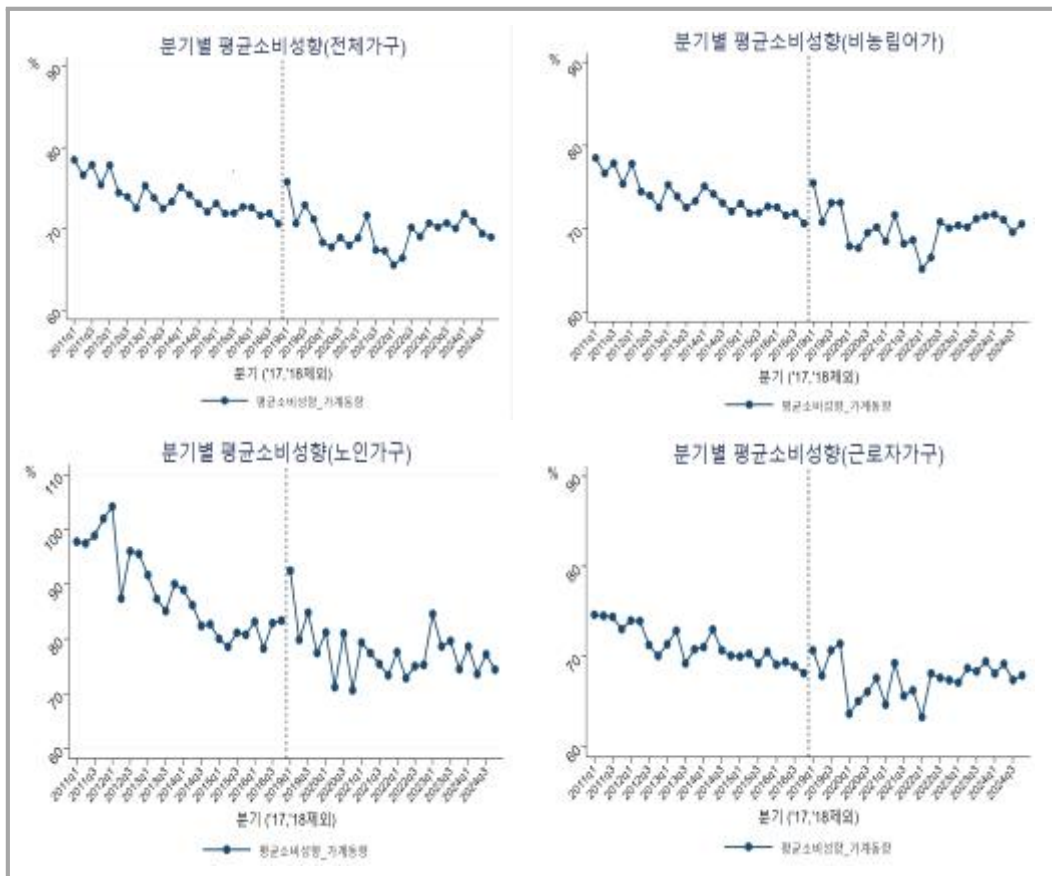
- 3) 가계동향조사에서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이며 18세 이상 64세 미만 가구원이 없는 가구를 의미
- 4)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

- 분기별 명목 소비지출은 2010년대에는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2020년대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런데 실질 소비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년대의 명목 소비지출은 대부분 물가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9년 이후 비농림어가가 추가되어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농림어가를 제외하고 산출함. 평균 소비지출이 미세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전체 가구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명목, 실질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 기초 연금 등 재정정책의 소득 효과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구의 명목, 실질 소비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 그러나 그 차이는 소득에 비하여 작아 보임



<그림 4-3> 가구 유형별 명목 및 실질 소비지출

-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이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이후에는 그 추세가 완화됨
 - 농림어가를 제외한 비농림어가의 경우에도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경향성은 전체가구에 비하여 작음
 - 노인가구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100%에 준할 정도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았으나 최근 70% 수준으로 낮아짐
 - 근로자가구의 경우 평균소비성향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남. 2010년대 초반 70% 중반 수준에서 현재는 60% 후반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4> 가구 유형별 평균소비성향

-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나 실질 소비지출에는 큰 변화 없음
 - 근로자가구에서도, 농림어가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다만 노인가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에서 지속적인 증가가 있음을 확인

2. 분배지수

2.1 분배지수의 종류⁵⁾

□ 대표적인 분배지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들 수 있음

- 지니계수는 가치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지표로 실증적 혹은 객관적 척도로 분류됨(윤기중, 1997)
-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 비교 등이 매우 용이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는 절대 지니계수를 평균값으로 나누어주어 정규화한 상대지니계수를 많이 사용함

$$\text{상대지니계수} = \frac{1}{2n^2 \mu} \sum_{i=1}^n \sum_{j=1}^n |y_i - y_j|$$

where i, j 는 서로 다른 가구를 의미

□ 분위 배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5분위 배율임

- 분위 배율은 사회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주관적 사회규범적 척도로 분류됨
- 각국에서는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되며,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 5분위 배율을 제공하고 있음
- 5분위 배율은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 점유율에 비하여 상위 20%의 (평균)소득 점유율의 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음
- 단점으로는 전체 집단의 상하위 40%만 사용하여 지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한계를 가짐

$$\text{5분위 배율} = \frac{\text{하위 80\%의 평균소득}(S80)}{\text{하위 20\%의 평균소득}(S20)}$$

□ 마지막으로 검토할 지수는 팔마비율(Palma ratio)임

- 팔마비율 역시 5분위 배율과 같이 주관적 사회규범적 척도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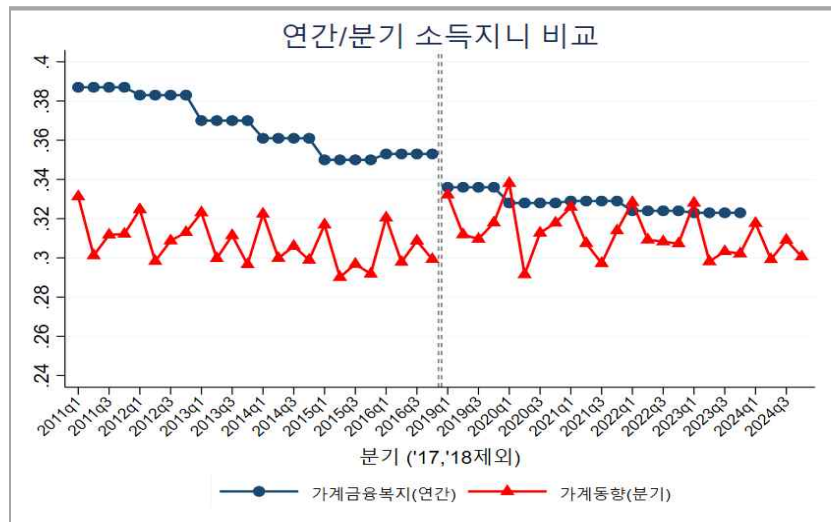
5) 유경준(2007) 참조함

- 팔마비율은 소득 하위 40% 점유율 대비 소득 상위 10% 점유율의 비율로 전체집단에서 50%의 표본만 사용함. 그러나 5분위 배율과 달리 중위 50% 계층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
- 팔마비율에서 제외된 중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질적인 반면 팔마비율에 포함된 하위 40%와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커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임(Palma, 2011).
- Cobham과 Sumner(2013)는 소득 하위 40%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변화로 지니계수 변동의 98% 이상을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

$$\text{팔마 배율} = \frac{\text{소득 상위 10\%의 점유율}}{\text{소득 하위 40\%의 점유율}}$$

2.2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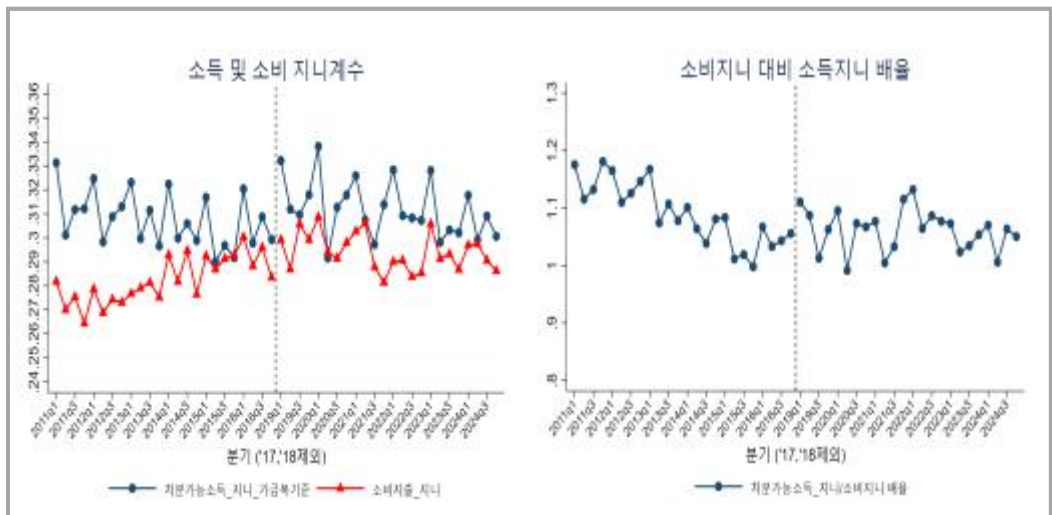
- 먼저 대표적 지니계수인 소득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연간 및 분기 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함



<그림 4-5> 연간 및 분기 소득 지니계수 비교

- 2019년 이후 가계동향의 분기 소득 지니계수의 추세를 고려할 때 가계동향 기준 연간 소득 지니계수도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지니계수가 조금 더 빠르게 우하향하고 있어 최근에는 가계동향의 소득 지니계수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지니계수의 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함
- 소비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소비평활화를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2010년대는 소득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 지니계수를 계속 증가하여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2019년 이후에는 소득/소비 지니계수 모두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갭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동조적인 모습을 보임
 - 아래 그림의 우측의 그래프는 두 계수 간 동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 지니계수 대비 소득 지니계수 배율로 다시 그린 것임. 이 그래프를 보면 최근 두 계수의 비율은 1.0~1.1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상당히 동조적임을 알 수 있음
 - 소득 지니계수와 소비 지니계수가 동조적이면 소비 지니계수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이하에서는 주 지수 간 동조성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그림 4-6> 소득 지니계수와 소비 지니계수 비교

- 소득과 소비 지니계수 동조성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비를 고려한 지니계수를 비교함. 다른 품목과 달리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일부인 실제주거비만을 소비지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아래 좌측 그래프는 소비지출 증가율과 실제주거비 전년동분기비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음. 2010년대 실제주거비는 분기별 5~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 반면 소비지출의 경우는 작지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우측의 주거비를 고려한 소비 지니계수를 보면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을 때의 소비 지니계수가 가장 높고, 주거비가 가장 많이 고려되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의제주거비가 포함될 때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2010년대 실제 주거비 상승기에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소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만약 소득이 동일하다면 당시 필수재인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여 다른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거와 같은 필수소비재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 감소를 가져오면서 주거비를 제외한 경우에는 소비분배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음
 - 소득 지니계수와 소비 지니계수가 유사한 레벨로 유지되고 동조성을 지니게 된 주된 이유가 주거비 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소비 지니계수는 주거비 포함과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두 가지 지수 형태로 작성 필요
 - 이 경우 소비 지니계수는 소득 지니계수와 차별화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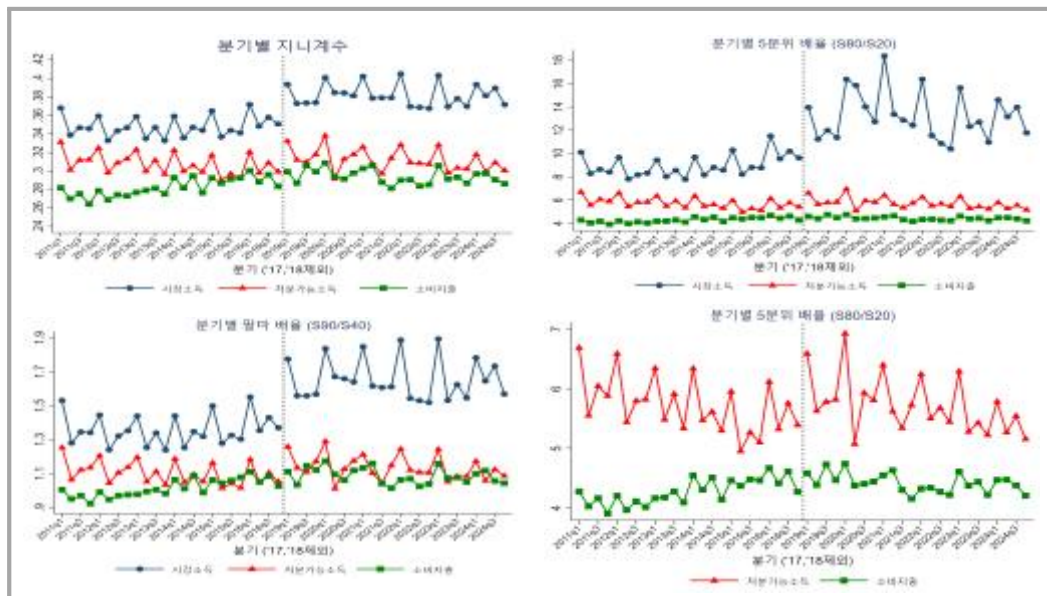


<그림 4-7> 실제주거비 증가율과 주거비를 고려한 지니계수 비교

- 6) 월세 및 보증부월세 가구의 실제로 지출한 월세금과 무상 가구 등의 의제월세만을 고려하는 것을 실제주거비로 정의함

2.3 분배지수 비교

- 소비 분배지표가 소득 분배지표와 차별화된 정책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성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어떠한 분배지표가 더 이해하기 쉽고, 활용성이 높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팔마 비율을 검토함
 - 먼저 지니계수는 소득 동차성, 익명성 등 소득 불평등 관련 이론적 공리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실증척도(유경준, 2007)일 뿐 아니라 계수 산출에 있어서도 모든 가구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장점을 가짐
 - 먼저 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소비지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각각 지니계수를 기반으로 5분위 배율과 팔마비율을 비교 검토함
 - 팔마비율의 경우 지니계수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같은 상승기에 그 상승률의 상대적 강도 등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임
 - 반면 5분위 배율의 경우 지니계수와 상승, 하락 등 방향성은 유사하게 보이나 그 강도는 지니계수와 다른 경우가 많아 보임
 - 우하단의 그래프는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다시 그린 것임. 이 그림을 보아도 지니계수와 방향성은 같으나 그 강도 등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아 보임



<그림 4-8> 가구 유형별 평균소비성향

-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부분결정계수(Partial R²)를 고려함
-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의 상관계수는 아래 <표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계수에서 0.99를 넘는 유사성을 보임. 반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의 상관계수도 0.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팔마비율에 비해서는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2> 계수별 상관계수

		지니계수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시장소득	지니계수	1		
	팔마비율	0.9967	1	
	5분위 배율	0.9595	0.9625	1
		지니계수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		
	팔마비율	0.9947	1	
	5분위 배율	0.9565	0.9301	1
		지니계수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소비지출	지니계수	1		
	팔마비율	0.993	1	
	5분위 배율	0.9569	0.9256	1

- 지니계수에 대한 팔마비율과 5분위 배율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바로 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임. 두 변수는 모두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임
-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함. 검증결과는 시장소득에 있어서는 13.59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에서는 각각 7.41과 6.98로 주의 단계로 나옴

	VIF	1/VIF
시장소득	13.59	0.073610
처분가능소득	7.41	0.135005
소비지출	6.98	0.143250

* 일반 기준 : VIF < 5 (무시 가능), 5~10 (주의), >10 (심각)

- 부분결정계수(Partial R²)는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방법임
- 즉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팔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하였을 때, 5분위 배율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을 팔마비율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팔마비율의 부분결정계수(Partial R²)의 개념임. 반대로 마찬가지로

- 결과를 보면 5분위 배율의 부분결정계수도 낮지는 않으나 팔마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시장소득의 경우는 그 격차가 매우 큼

<표 4-3> 부분결정계수(Partial R²)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시장소득	0.9165	0.0001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처분가능소득	0.9606	0.6854
	팔마비율	5분위 배율
소비지출	0.9522	0.7116

- 결론적으로 지니계수는 전체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성이 있지만 직관성이 낮고, 5분위 배율은 직관적이지만 전체 분포 대표성이 낮음. 팔마비율은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니와 비슷한 대표성’과 ‘직관적인 해석’을 동시에 제공함
- 즉 팔마배율은 전체 표본의 50%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변동의 99%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는 달리 5분위 배율은 표본의 포괄범위는 팔마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설명력은 팔마비율에 비하여 많이 떨어짐. 이에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에 대한 불평등 지수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임

3. 엔겔계수

3.1 이론적 논의

- 1857년 엔겔(Ernst Engel)은 총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비중으로 엔겔계수를 정의함

$$\text{엔겔계수} = \frac{\text{식료품비}}{\text{총소비지출}}$$

- 엔겔의 관심은 “빈곤·생활수준·후생”에 있었으며 가계가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비중이 높아지는 미시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함. 가구별 비율을 먼저 산출함으로써 그 가구의 생활구조를 보여줄 수 있음. 이는 미시적 후생지표로 사회계층적 비교에 적합한 지표임

- 즉 엥겔 계수 또는 비율의 원형(Original Engel's Law)은 “개별 가구 단위(micro household)”로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는 방식임. 개별 가구 중심의 엥겔계수라고 할 수 있음
- 엥겔계수는 가계의 경제적 빈곤·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오래된 지표임. 식료품은 필수재(necessity)이므로 처분가능소득이 낮을수록 식비 비중이 높아짐
 - 엥겔계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분위가 낮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엥겔계수가 낮다는 것은 생활 수준이나 후생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엥겔계수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유용함. 즉 경제가 발전하면 식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외식·문화·교통·교육 등 재량소비재(선택재, 사치재)의 비중이 증가함
 - 분배·빈곤·구조적 변화 평가의 기본 지표로 특히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 압박(cost burden)을 파악할 때 핵심지표가 됨
- 엥겔계수 작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본 고에서는 편의상 이 두 가지 방식을 각각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으로 명명하기로 함
 - 첫째 미시적 방식은 원래 엥겔이 주장한 방식으로 개별 가구 단위로 먼저 총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용의 비율을 산출한 뒤, 이를 평균함
 - 이 방식은 가구 간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즉 저소득 가구의 높은 식료품 비중을 전체 계수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음

<1단계>	<2단계>
$\text{엥겔계수}_i = \frac{\text{식료품비}_i}{\text{총소비지출}_i}$	$\text{엥겔계수} = \frac{1}{N} \sum \text{엥겔계수}_i$

- 둘째 거시적 방법은 모든 가구의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를 각각 먼저 합산한 후, 그 비율을 구하여 엥겔계수를 산출함
- 이 방식은 국가 전체의 총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을 산출하여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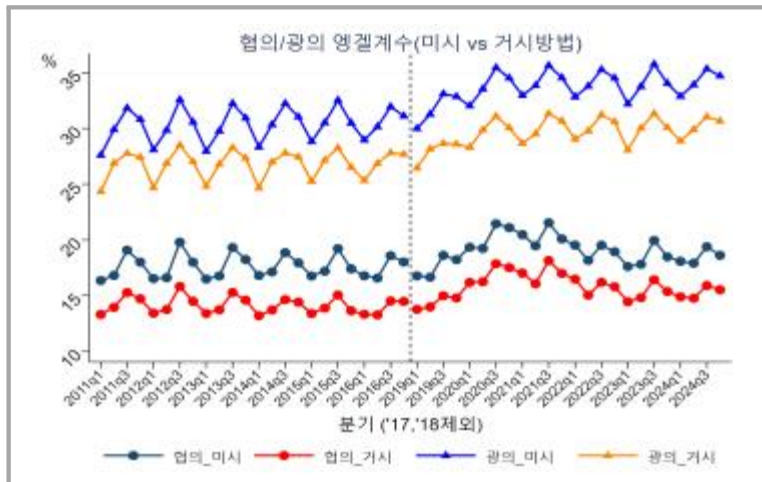
시에 유용함. 개별 가구의 비율을 구하지 않고도 엔겔계수를 구할 수 있어 국민계정 등 거시 통계로도 쉽게 산출할 수 있음

- 그러나 산출 평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총량이 보이지 않는 가중치로 작동함으로써 사실상 고소득층의 상태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text{엔겔계수} = \frac{\sum \text{식료품비}_i}{\sum \text{총소비지출}_i}$$

3.2 엔겔계수 작성 및 비교

- 최근 우리나라의 엔겔계수에 대한 논의는 식료품 및 비주류만 포함하는 기존의 엔겔계수(협의)와 식료품비에 식사비(외식비 등)를 포함하는 엔겔계수(광의) 두 가지 버전 산출 필요성이(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제기되고 있음
 - 배달 음식, 커피 등이 포함된 외식도 많은 가구에 있어서 필수재처럼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임
 - 협의 및 광의의 엔겔계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여기에서는 우선 협의, 광의의 개념으로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으로 산출한 엔겔계수를 비교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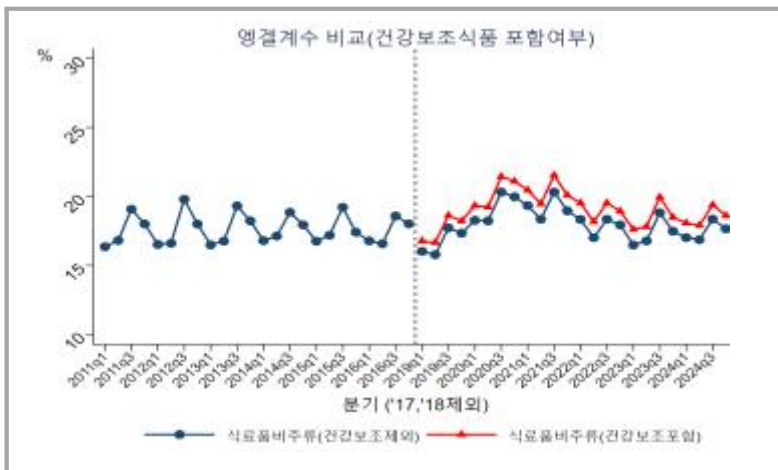


<그림 4-9> 가구 유형별 평균소비성향

- 협의, 광의 모두에 있어서 거시적 방법이 미시적 방법보다 엔겔계수가 낮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적 방법 산출 시에 소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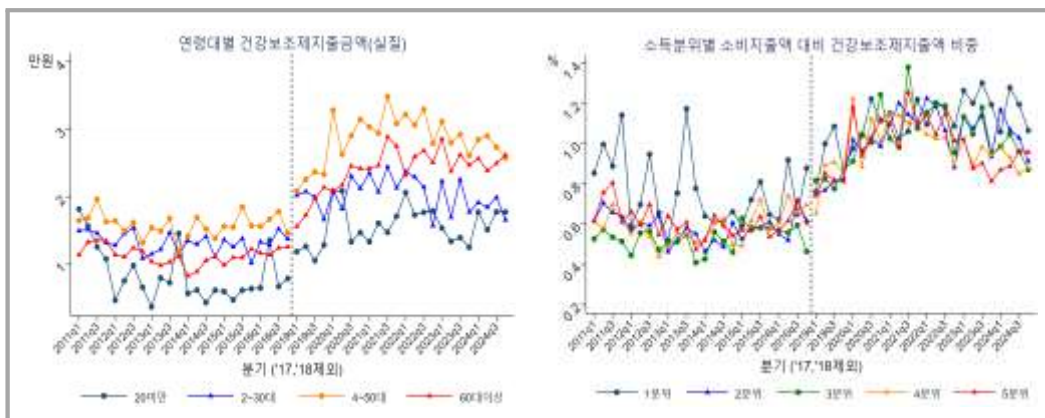
출 대비 식료품지출 비중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가중치가 더해지는 방법이 거시적 방법이기 때문임

- 주로 국민계정을 통해서 엔겔계수를 산출하거나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엔겔계수 산출 시 이 방법이 사용됨
 - 국민계정 자료의 경우 민간 소비지출에는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어 가계동향의 미시 자료와 포괄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미시적, 거시적 작성 방법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계동향 자료에 기반한 미시 엔겔계수와는 직접 비교가 어려움
 - 협의-미시 엔겔계수의 경우 최근 10% 후반에서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협의-거시의 경우 1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광의-거시의 경우 3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미시의 경우 35% 내외로 5%p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시적 방법론으로 엔겔계수 작성 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건강보조식품 포함 여부임
- 가계동향조사는 2025년 개편으로 인삼, 영양보조제 등을 건강보조식품 항목을 신설하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분류에 포함시켰음
 - 고령화 등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유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분류에 건강보조식품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엔겔계수 작성에 이 부분을 포함시킬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강보조식품 포함 시 엔겔계수는 1%p 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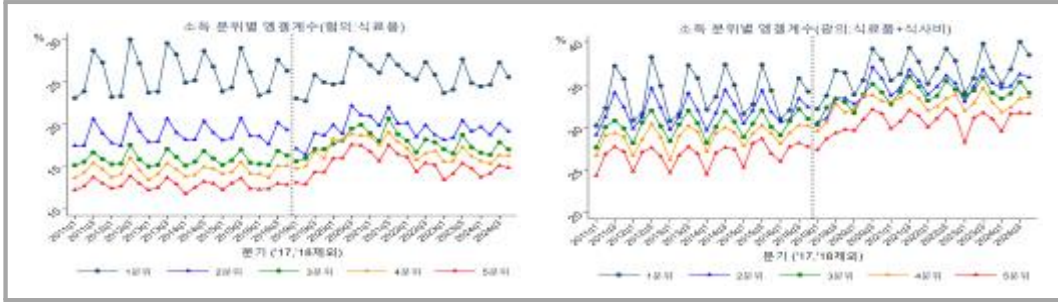
<그림 4-10> 건강보조식품 포함 여부에 따른 협의의 엔겔계수

- 건강보조 식품의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가구주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조식품 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4~50대와 60대 이상에서 지출금액 증가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장년층과 고령층에 건강보조식품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2010년대는 건강보조식품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2023, 2024년도 들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총소비지출액 대비 건강보조제 지출액이 증가하는 필수재와 같은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음
-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이 필수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나 이를 엔겔계수에 포함시킬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 특히 만약 건강보조식품을 협의의 엔겔계수에서 제외한다면 광의의 엔겔계수에는 포함시킬 것인지도 판단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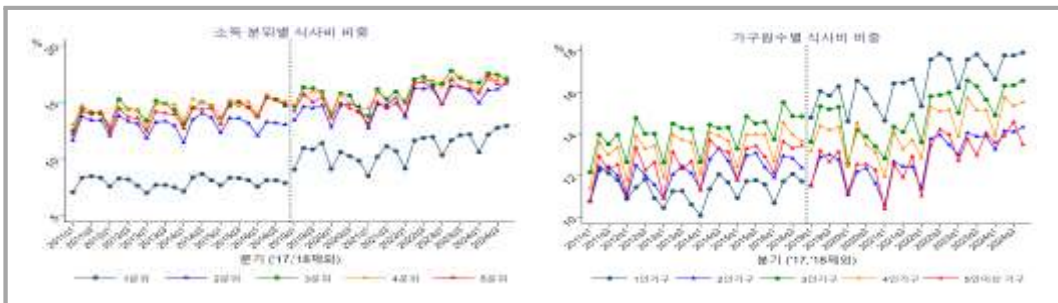
<그림 4-11> 건강보조식품 지출 관련 연령대별 지출액 및 소득분위별 비중

- 광의의 엔겔계수는 협의의 엔겔계수 개념에 식사비를 포함시키는 것임. 식사비는 중분류인 12대 비목 중 음식·숙박 분류에 포함됨. 식사비는 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 및 커피숍 항목으로 분류됨
- 먼저 소득분위별로 협의의 엔겔계수와 광의의 엔겔계수를 비교하여 필수소비재적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함
-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광의, 협의 모두 지출 비중이 낮아져 필수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특성이 모두 협의 즉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기인한 특성일 수 있어 추가 분석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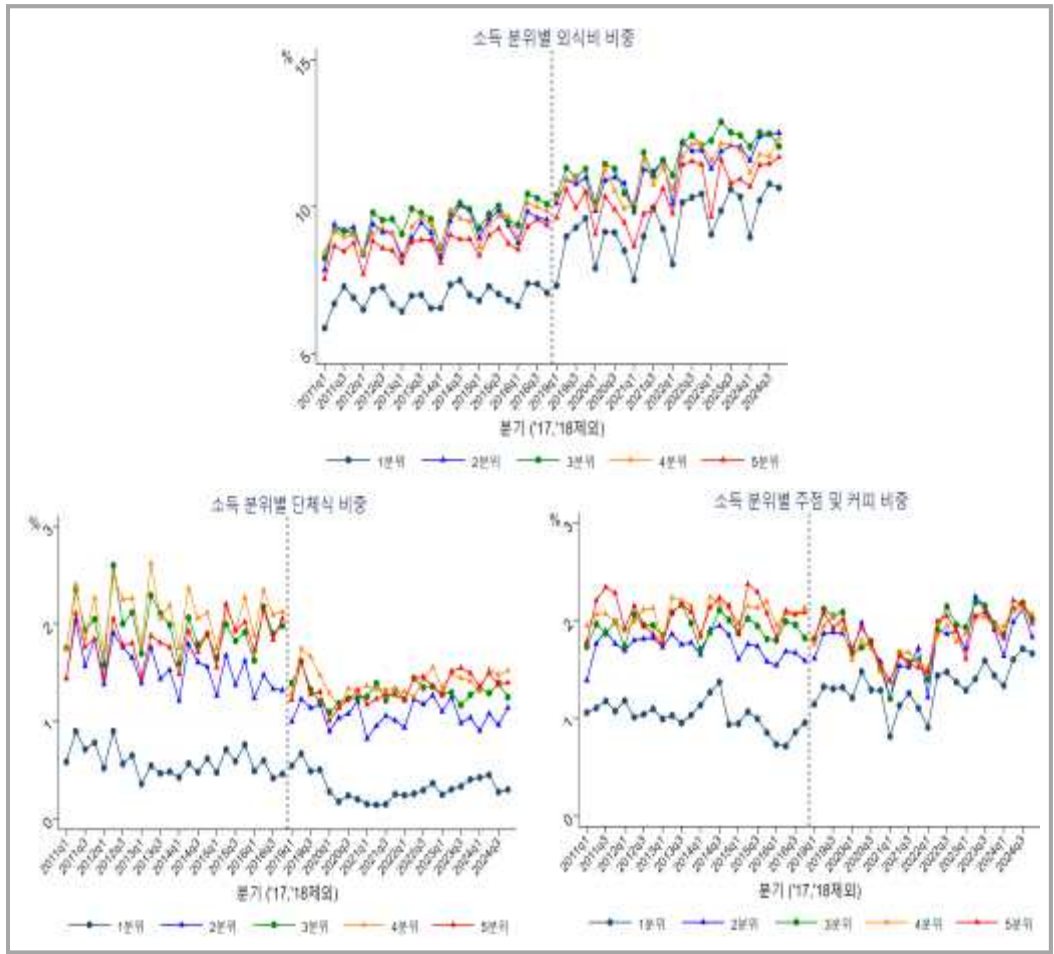
<그림 4-12> 소득분위별 협의 및 광의 엥겔계수

- 다음으로 식사비가 필수재적 성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소비지출 대비 식사비(외식비 등) 비중은 1분위에서 가장 낮고 그 외 2~5분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필수소비재의 특성을 가지지는 않으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는 재량소비재(또는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지도 않는 것으로 보임
- 가구의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원수별 식사비 비중 추이를 비교함. 2019년 이후 1인 가구의 식사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인 가구의 식사비 비중은 낮고, 3인 가구 이상에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식사비의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이는 배달 음식의 영향으로 이해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조리보다는 배달 음식이나 외식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임.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식사비 비중이 높은 것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식사비를 완전히 필수소비재라고 이해할 수는 없으나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면 배달 음식 비중 확대를 식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배달 음식은 일반적인 외식과 달리 집에서 조리하는 식사의 대체재 역할을 하므로 필수소비재적 성격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13> 소득분위별, 가구원수별 식사비 비중

- 식사비를 외식비, 단체식, 주점 및 커피숍으로 나누어 소득분위별 비중을 분석함
 - 3가지 분류 모두에서의 공통점은 1분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낮다는 점임.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분석에서도 식사비가 완전히 필수소비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 그러나 1분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위는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량소비재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보임
 - 결국 식사비를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 보아도 세 가지 분류 모두 식사비와 유사한 특성이 있어 세부 항목 중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는 포함하는 방식보다는 식사비 전체에 대한 광의의 앵겔계수 작성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그림 4-14> 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 및 커피숍 비중

- 엔겔계수를 산출한다고 하면 협의와 광의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임.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
 - 소득계층별 식료품비 부담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엔겔계수는 미시적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을 제안
 - 저소득층에는 식료품비 부담이라는 의미를 가지되, 중·고소득층을 위한 엔겔계수에 새로운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 협의는 저소득층에 의미를 두고, 광의는 중·고소득층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건강보조제가 식료품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엔겔계수 작성 시 제외하는 것을 제안
 - 식사비를 포함하여 광의의 엔겔 작성 시 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 및 커피숍을 모두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식사비에는 단순한 식료품비뿐 아니라 식사 제공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

4. 슈바베계수

가계의 후생(welfare), 생활 수준(living standard), 소비구조(consumption pattern)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소비지표는 엔겔계수와 슈바베계수임

4.1 이론적 논의

- 슈바베계수(Schwabe's Ratio)는 1860년대 후반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슈바베에 의해 소득이 높을수록 집세 등 주거비의 절대액은 커지지만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진다는 경험 법칙에서 출발함
 - 주거비 부담(Housing burden)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비 항목 중 하나인 주거비는 필수재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짐
 - 슈바베계수는 주거안정성·거주취약성 측정의 기초 지표로서의 역할을 함. 슈바베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주거비지출 압박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이는 저축 감소, 주거 이동성 감소, 주거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가계소비 구조의 장기추세 파악이 가능함. 예를 들어 경제 발전, 부동산가격 상승, 도심화, 주택공급 부족 등이 주거비 비중에 반영됨. 주거비 비중 상승은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함
- 슈바베계수 역시 앙겔계수와 마찬가지로 작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앙겔계수에서와 같이 본 고에서 편의상 이 두 가지 방식을 각각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으로 명명하기로 함
 - 첫째 미시적 방식은 개별 가구 단위에서 총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용의 비율을 산출한 뒤, 이를 평균함
 - 이 방식은 가구 간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즉 저소득 가구의 높은 주거비 비중을 전체 계수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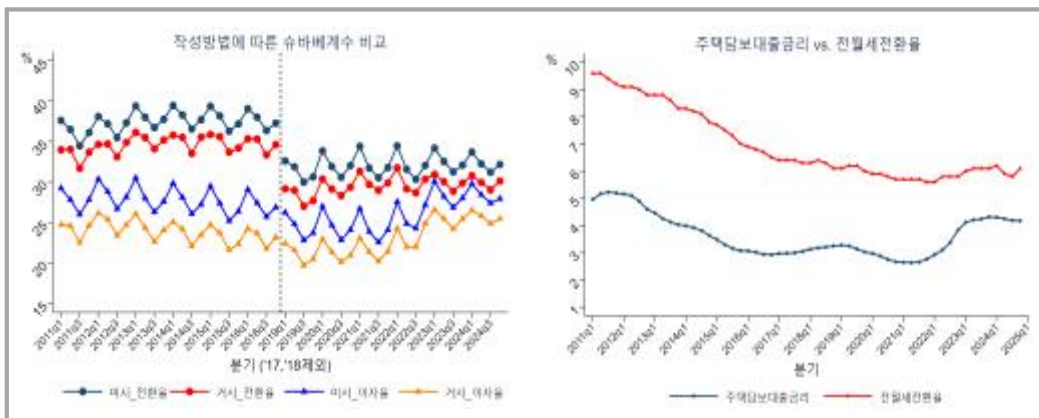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text{슈바베계수}_i = \frac{\text{주거비}_i}{\text{총소비지출}_i}$	$\text{슈바베계수} = \frac{1}{N} \sum \text{슈바베계수}_i$

- 둘째 거시적 방법은 모든 가구의 총소비지출과 주거비를 각각 먼저 합산한 후, 그 비율을 구하여 슈바베계수를 산출함

$$\text{슈바베계수} = \frac{\sum \text{주거비}_i}{\sum \text{총소비지출}_i}$$

- 이 방식은 국가 전체의 총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을 산출하여 국제 비교 시에 유용함
- 또한 개별 가구의 비율을 구하지 않고도 슈바베계수를 구할 수 있어 국민계정 등 거시 통계로도 쉽게 산출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앙겔계수에서와 같이 산출 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거비지출총액이 보이지 않는 가중치로 작동함으로써 사실상 고소득층의 상태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주택임대차 제도가 존재함. 또한 임대차 가구뿐 아니라 자가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가의 주거서비스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상당법을 가정할 때 전세와 자가의 주거비 부담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할 것인지, 이자율로 환산할 것인지가 슈바베계수에 있어서는 또 다른 주요한 이슈임
 - 슈바베계수 역시 미시적 방법이 거시적 방법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월세전환율⁷⁾이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 전환율을 사용할 때가 이자율을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슈바베계수가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5> 작성방법 및 적용 전환율에 따른 슈바베계수

- 슈바베계수 역시 거시통계와 미시통계의 포괄범위가 다름. 특히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주거수도광열 비목에 실제주거비(실제 매달 지불하는 비용)만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산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미시통계와 거시 통계에 의한 슈바베계수를 비교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위 그래프는 모두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했으며, 실제주거비뿐 아니라 월세 평가액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가 및 전세의 월세 지출금도 포함된 계수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및 미시적 방법론만 변경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방법론에 따른 산출계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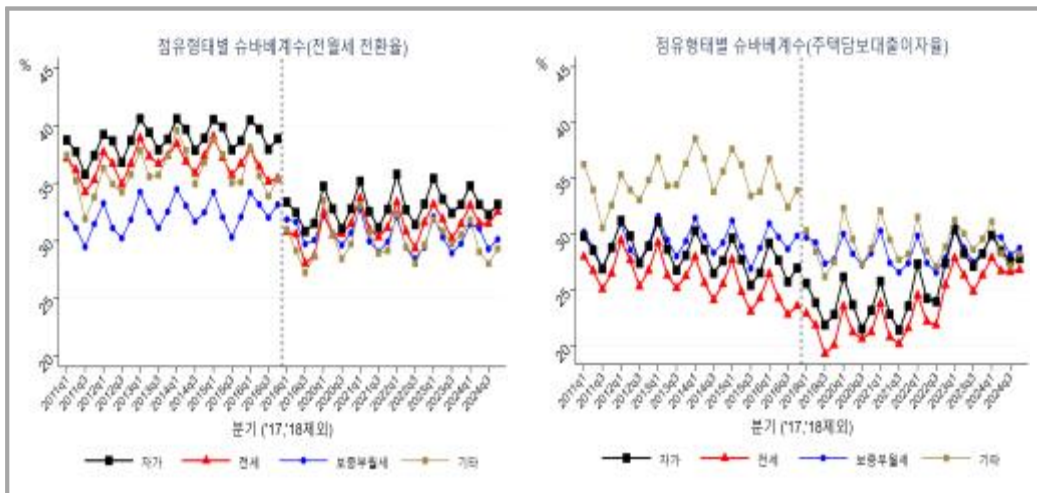
7) 지금 그래프는 이자율과 비교를 위하여 전국, 종합주택유형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임. 전월세전환율은 지역, 주택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함.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높음.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아파트 유형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낮고, 아파트 외 주택유형에서는 더 높음

- 슈바베계수 작성 시 전세금이나 월세의 보증금, 자가의 주거서비스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체감도가 높은가의 이슈가 있음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 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계수임. 즉 전월세전환율의 개념은 전세와 동일한 월세 주택이 존재할 때 각각 전세금과 월세금에 대한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임. 거시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와 공급, 그리고 차주의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에 따라 달라짐
 - 전세의 경우 실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조달했다고 하면 실제 전세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text{전세금} \times \text{이자율} / 12$)가 됨
 - 다만 해당 주택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효용은 인근의 유사한 주택의 월세($\text{전세금} \times \text{전월세전환율} / 12$)에 해당하는 만큼 얻게 되므로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에 의한 차액은 전세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임
 - 즉 전세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이고, 얻는 효용은 월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
-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점유형태별로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을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함
 - 먼저 무상, 사택, 영구임대, 무보증월세가 포함된 기타⁸⁾의 경우 보증금이 없거나 미미하여 전월세전환율이나 이자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월세가 중심이 되는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도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에 따른 격차는 4%p 이내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자가와 전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사용 또는 이자율 사용에 따라 규모나 패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구간에서 10%p 내외에서 차이가 발생함
- 전세와 자가의 경우 2010년대에 비하여 2020년대 초반에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 모두 하락하여 슈바베계수는 두 방법에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자율을 사용할 경우 그 패턴이 이자율의 패턴과 유사함을 알 수 있음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결정되고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전월세전환율은 차주의 상환능력과는 별개로 지역별, 주택유

8) 무보증월세의 규모가 크지 않고 보증금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 그래프에서는 기타로 분류함

형별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 이자율은 기본 이자율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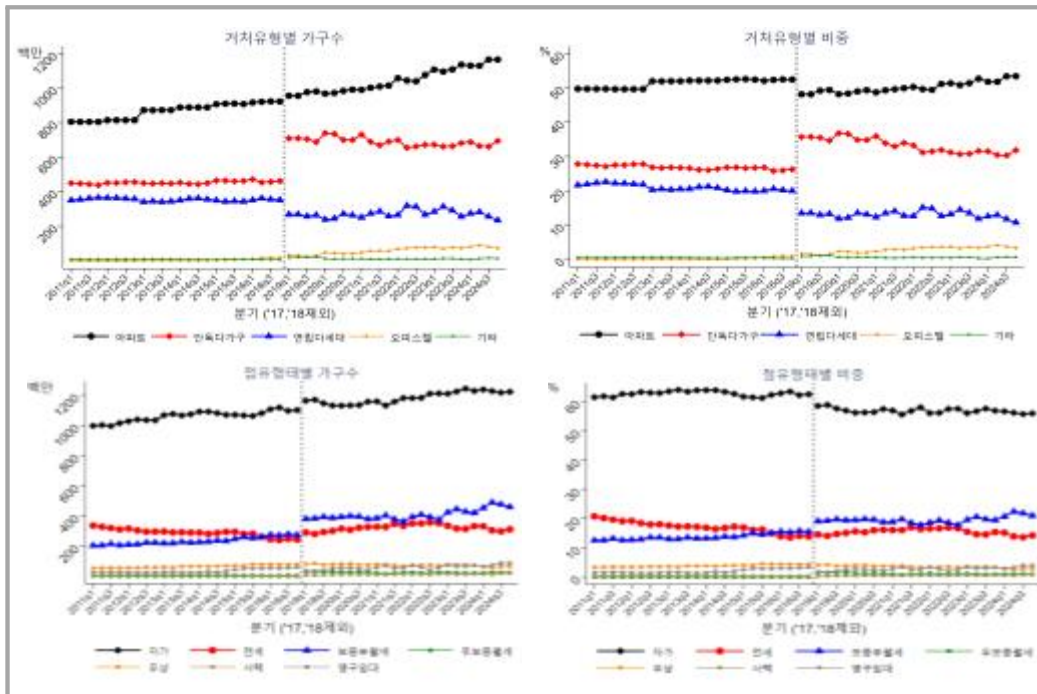
- 즉 전월세전환율은 주거서비스의 적정가치를 산출하는 반면 이자율은 시장가격을 산출한다고 할 수 있음
- 전월세전환율⁹⁾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결정되는 특성상 자가, 전세, 무상 등 점유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자가의 경우 고가주택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주거부담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부합하는 결과임. 이 경우는 주택시장만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이자율을 사용할 경우는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비용을 고려한 경우임. 이 경우 전세와 자가의 경우 본인들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월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음
- 자가의 주거부담이 전체적으로 소폭이나마 전세보다 높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자가와 전세의 소득 차이보다 자산 즉, 주택에 기인한 자산 차이가 더 크기 때문으로 이해됨



<그림 4-16> 점유형태별 슈바베계수

9) 전월세전환율은 이자율과 달리 지역, 주택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높고,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유형에 비하여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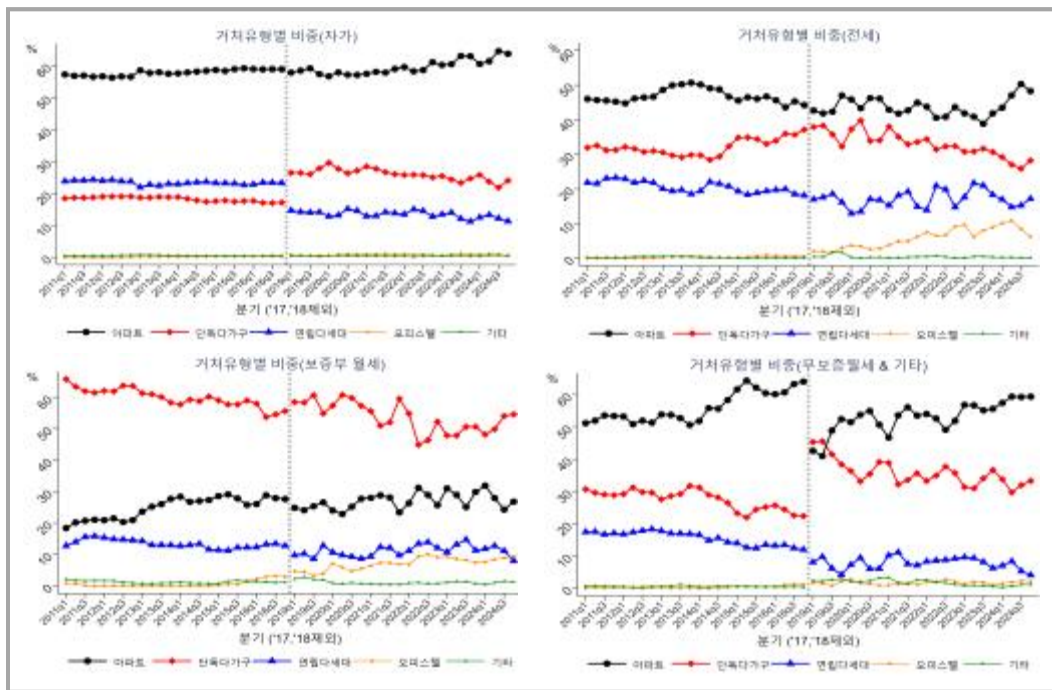
- 전월세전환율과 이자율 사용 시 슈바베계수가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택유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자가와 전세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주택유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¹⁰⁾을 사용한다면 전월세전환율 사용 시에 자가와 전세의 주거부담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됨
- 거처유형별로는 아파트 유형이 가구 수뿐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단독다가구와 연립 다세대의 경우 절대 가구 수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감소 중에 있음
 - 오피스텔은 가구 수와 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점유형태별로는 2010년대는 자가 비중이 60%를 넘었으나 2019년 이후로는 50%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세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소폭 증가
 - 영구임대의 경우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4-17> 거처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및 비중

10)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아파트 외의 전월세전환율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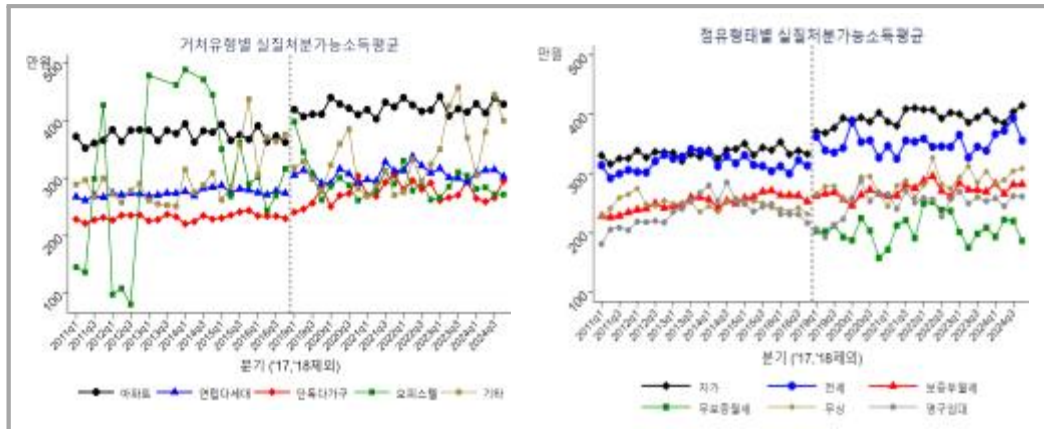
- 슈바베계수 등 가구단위 분석 시 점유형태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음. 점유형태별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임. 점유형태별로 거처유형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함
 - 자가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2023년 이후 60%를 상회함. 2019년 이후 연립다세대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단독다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전세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40~5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독다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오피스텔의 비중이 증가함
 - 보증부월세의 경우 자가나 전세와 달리 아파트의 비중이 20~30%대로 자가와 전세의 대략 절반가량을 차지함. 단독다가구 형태가 50%를 보이고 있으며, 연립다세대는 10%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근 오피스텔도 증가 추세임
 - 무보증월세와 기타의 아파트 유형이 50% 수준을 보이고, 단독다가구 형태가 30%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4-18> 점유형태별 거처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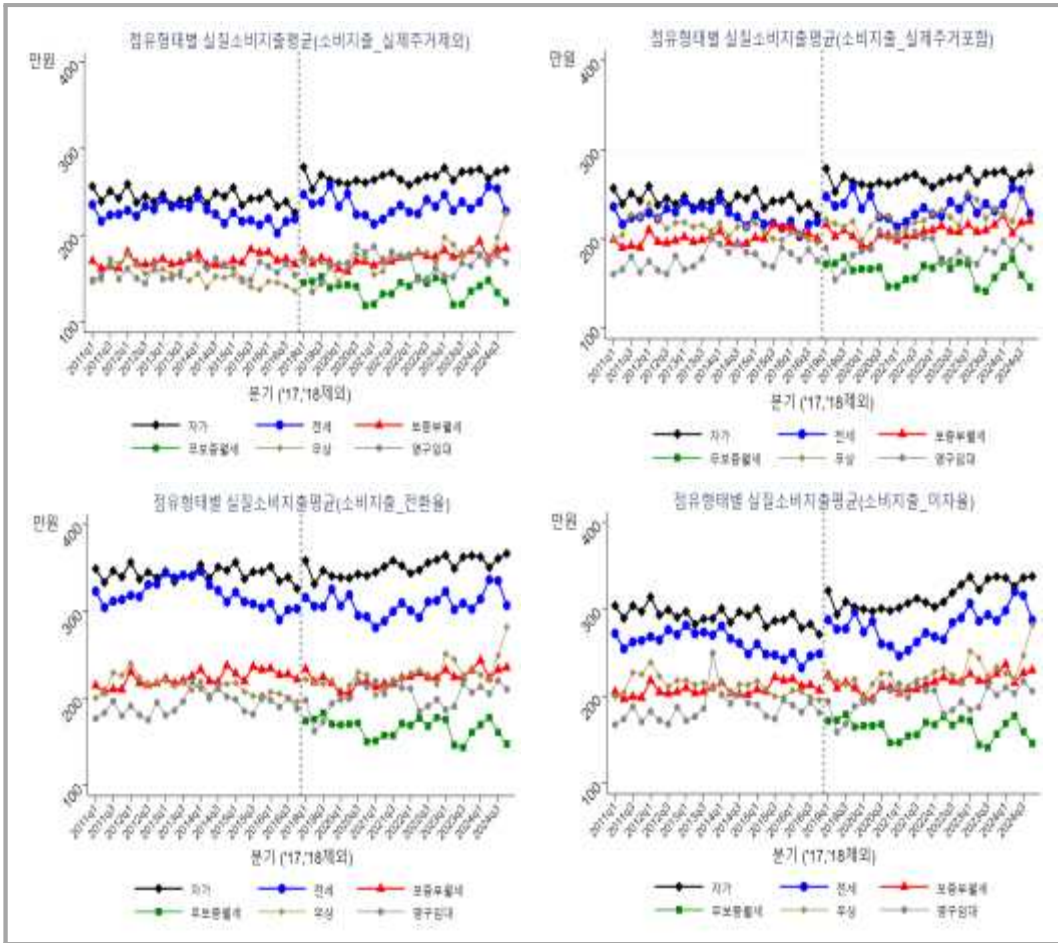
- 거처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실질처분가능소득 평균은 약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점유형태별로는 자가의 경우 역시 최근에 400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유사하나 연립다세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전세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 평균은 소폭 낮은 수준에서 자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다만 2019년 이후 자가와 전세의 갭은 더 커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
- 보증부월세 가구는 자가나 전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그림 4-19> 거처유형별, 점유형태별 실질처분가능소득 평균

- 주거비산출 방법에 따른 점유형태별 실질처분가능소득 수준 변화를 비교함.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식은 <그림 4-20>의 우측 상단의 실제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지출임
 - 실제주거비를 포함할 때 소비지출 수준은 자가의 경우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세가 보증부월세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실제주거비를 제외하고 비교한 것이 좌측 상단의 그래프임. 월세가구에만 해당하는 실제주거비를 제거하자 월세가구의 실질소비지출 평균은 전세가구보다 확연히 작아짐을 알 수 있음
 - 하단의 그래프 2개는 자가와 전세에도 주거비를 추가해 준 그래프임. 전월세전환율 기준으로 주거비를 추가해 준 것이 좌측 하단의 그래프임. 자가와 전세가 월세보다 상당히 큰 소비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측 하단은 이자율로 자가와 전세의 주거비를 추가해 준 그래프임. 전월세 방법보다는 월세와 자가(전세)의 격차가 작음. 이는 실제주거비를 제외했을 때의 격차와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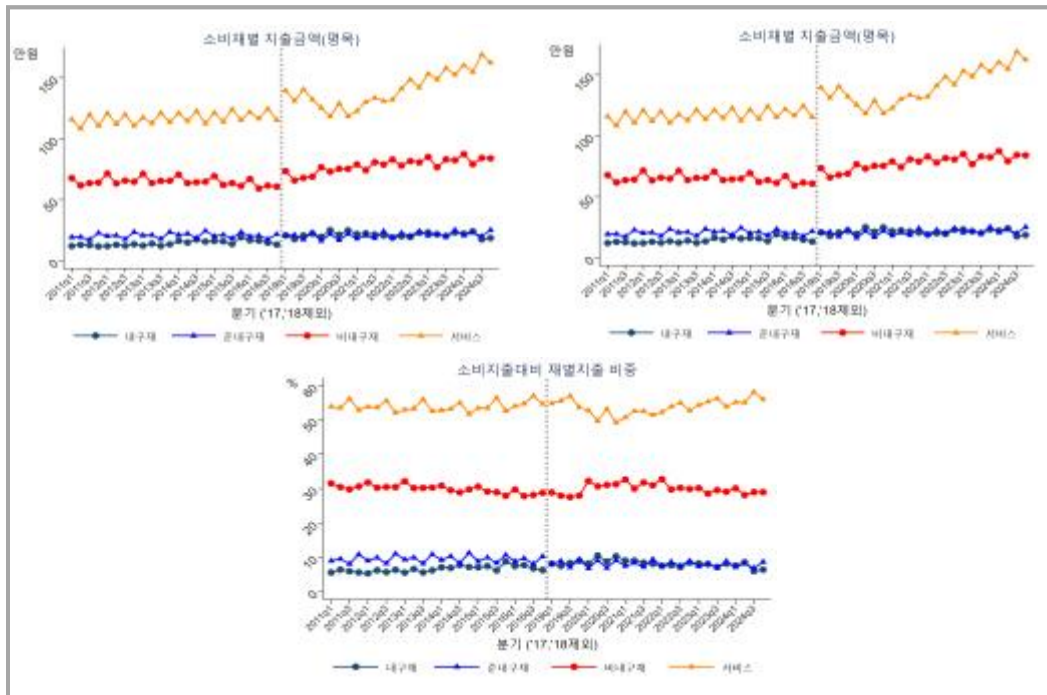


<그림 4-20> 주거비를 고려한 점유형태별 실질 소비지출

- 슈바베계수를 작성한다면 자가 및 전세 포함 여부에 따른 2가지 버전으로 작성
 -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미시적 산출방식 제한
 - 주거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슈바베 작성 시 실제주거비만 포함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 우려가 있음
 - 주거비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식과 자가, 전세, 월세 모두를 포함하는 2가지 방식으로 제시할 것에 대한 고려 필요
 - 자가와 전세를 포함하는 경우 통계적 정합성을 위하여 전월세전환율과 (대출)이자율 (가중)평균 사용을 우선 고려할 필요

5. 재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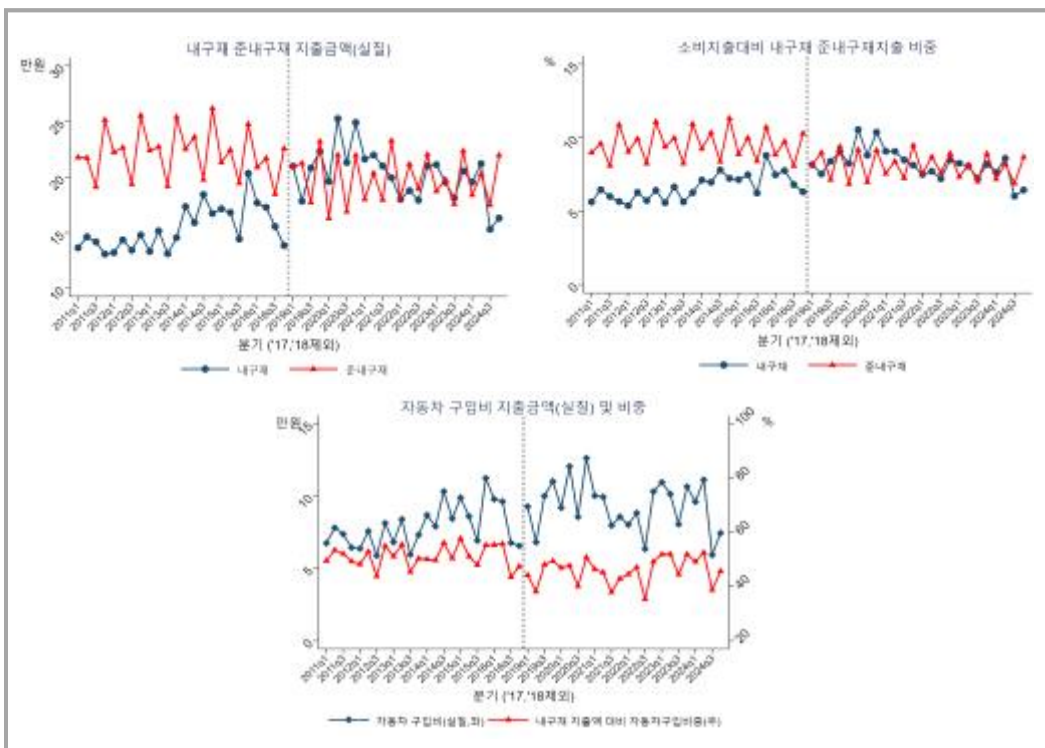
- 경기 상황에 따라 가구의 재별 지출 비중이 달라짐. 가구의 소비지출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계 경기가 좋을 때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재별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항상 50% 이상을 차지함
 -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 모두에서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실질 기준으로 150만 원에 근접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료품 등 비내구재임. 전체 소비지출에서의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 수준에서도 6~70만 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그림 4-21> 재별 소비지출 금액과 비중

- 내구재의 실질 소비지출 금액과 비중은 코로나 시기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등의 지출이 줄고 내구재 소비가 증가함
 - 준내구재는 금액과 비중 모두에서 다소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단의 그림은 자동차 실질 구입 금액 및 내구재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자동차가 내구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50% 수준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내구재 지출 금액 자체는 자동차구입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실제 내구재 지출금액 패턴과 자동차 지출금액 지출 패턴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음. 우측 상단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준내구재의 변동성과 내구재의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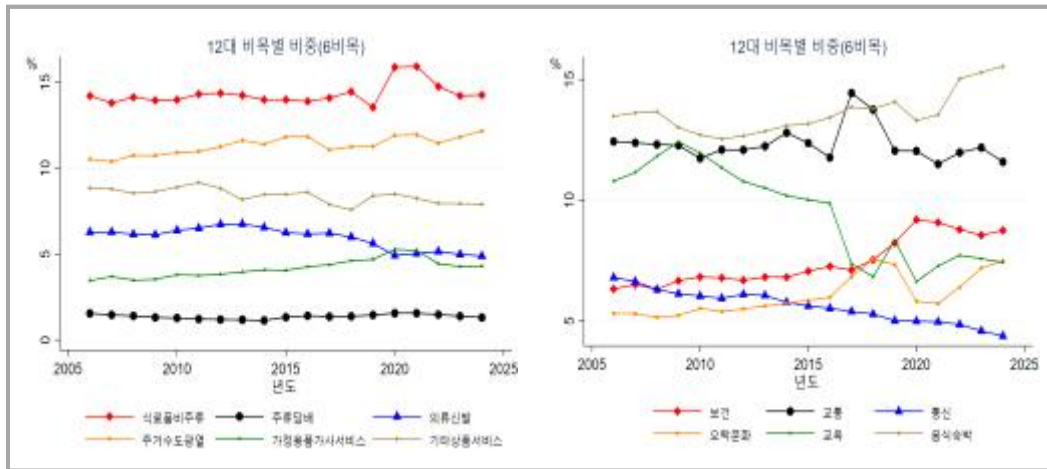


<그림 4-22> 내구재, 준내구재, 자동차 지출금액 및 비중

- 가계가 인식하는 가계 경제상황을 객관적 경성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내구재의 경우 가계가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자동차의 비중이 높기는 하나 그렇다고 내구재 전체의 변동성이 우려할 수준으로 완전히 커지는 것은 아님
 - 서비스 비중의 지속적 확대도 측정할 필요

6. 기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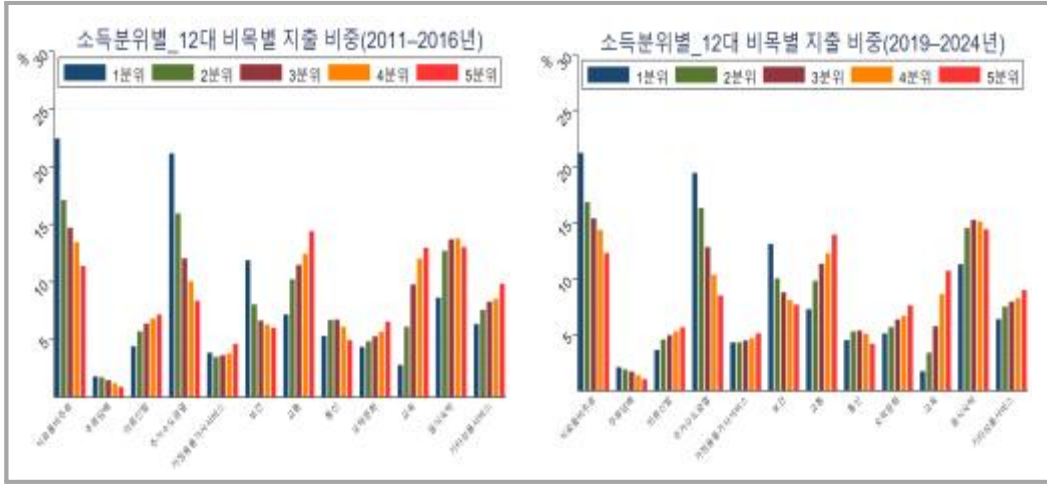
- 소비지출에서 12대 비목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주요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함
- 12대 비목을 6개 비목으로 나누어 시계열 추이를 비교함
 - 좌측 그래프에서는 의류신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주거수도광열과 가정용품 가사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측 그래프에서는 보건 지출이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숙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교육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도 다소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음식숙박, 오락문화의 증가는 재량소비재의 지출 증가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23> 12대 비목별 시계열 추이

- 12대 비목의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나누어서 그 영향을 고찰함
 - 소득분위별로 우하향하는 비목은 필수소비재,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진 비목은 재량소비재라고 할 수 있음
 - 동 기준으로 그래프에서 보면 식료품비주류, 주거수도광열은 확실한 필수소비재로, 교통, 교육은 확실한 재량소비재로 볼 수 있음
 - 2010년대 대비 2020년대에 보건, 음식숙박은 증가하고 교육은 하락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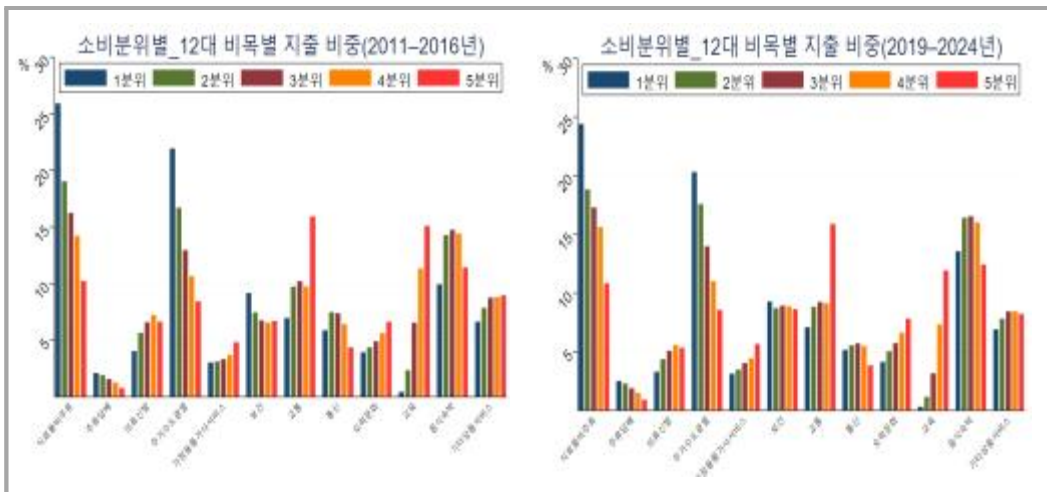
- 특히 교육은 소득분위별 패턴에서도 변화함.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화



<그림 4-24> 소득분위별 12대 비목별 시계열 추이

□ 소비분위별 12대 비목 시계열 추이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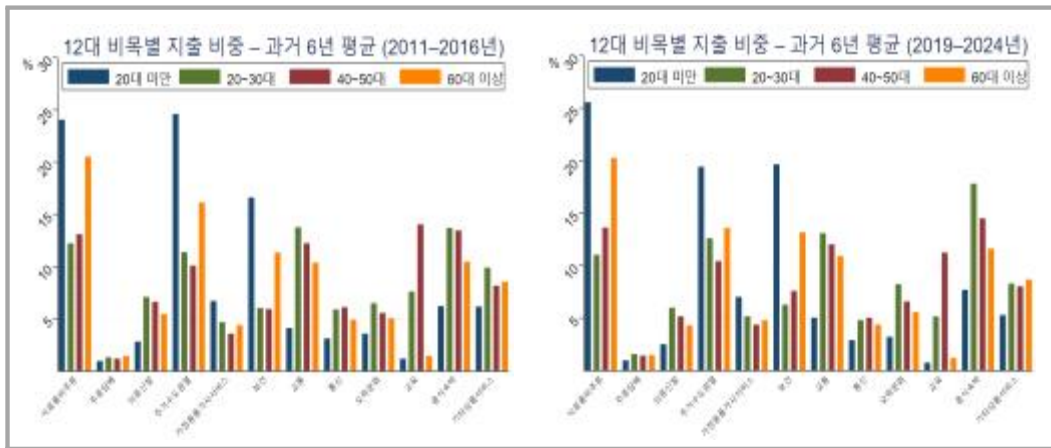
- 교통과 교육에 있어서 5분위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
- 소비는 자동차구입 등 내구재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고가의 서비스 비용 지출이 있는 가구가 5분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즉 소비지출 그 자체가 곧 구분 기준이 되는 한계
-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등 필수 품목은 분위별 갭이 소득에 비하여 더 커짐



<그림 4-25> 소비분위별 12대 비목 시계열 추이

□ 가구주 연령대별 12대 비목 시계열 추이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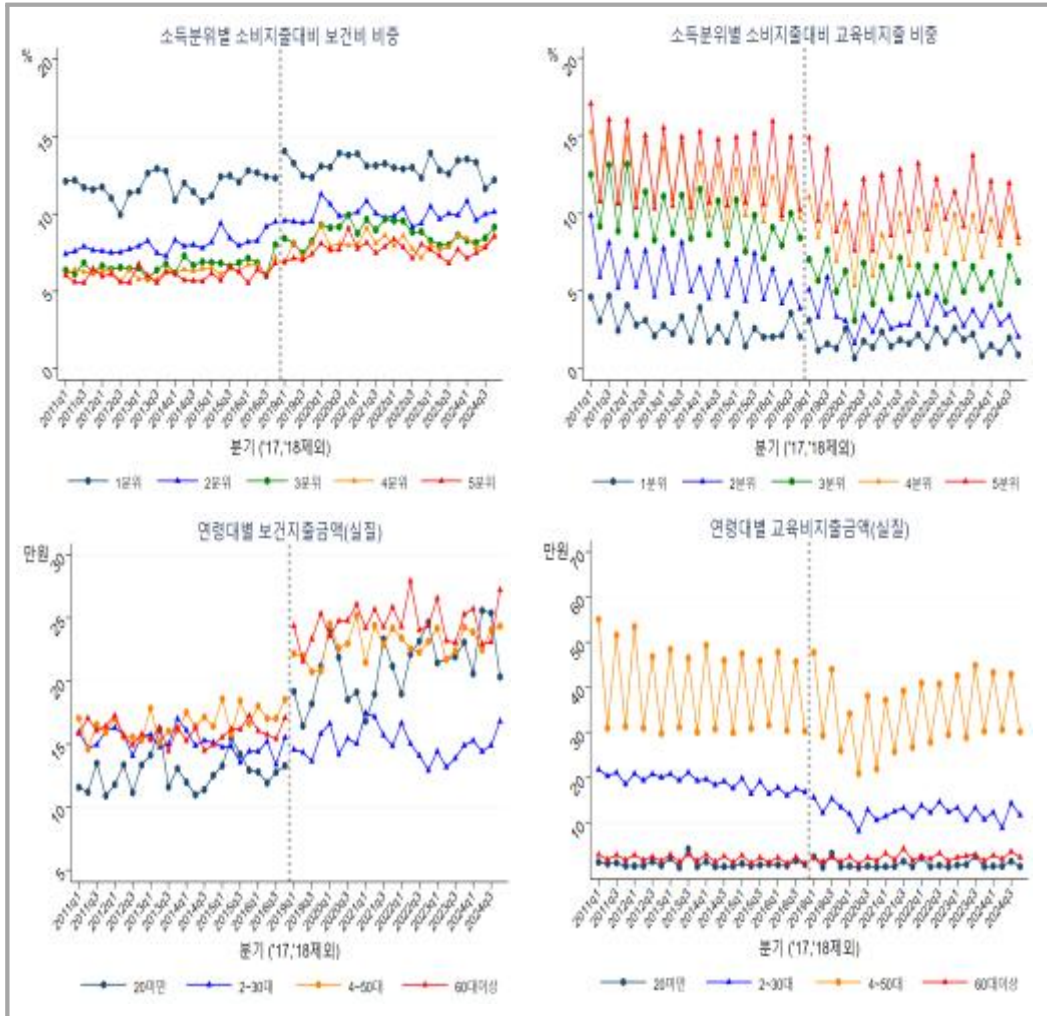
-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료품 소비, 주거수도광열, 보건 비용 증가. 연령대와 소득의 상관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음
- 보건 비용 증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교육비 감소는 학령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변화를 반영
- 20~30대 음식숙박의 급격한 증가는 배달 플랫폼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



<그림 4-26> 가구주 연령대별 12대 비목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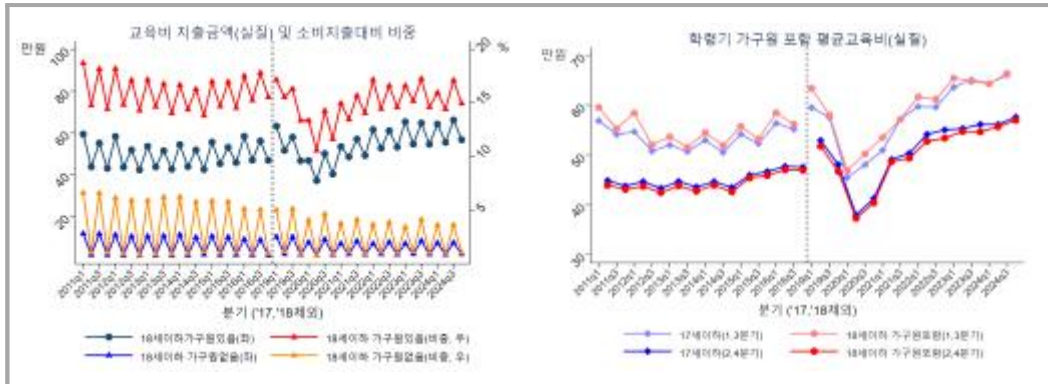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과 보건 부문에 대하여 연령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시도함

- 보건비 지출 비중은 1분위가 가장 높으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짐. 즉 보건 지출 구조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필수재적 소비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반대로 교육비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그 부담이 커지고 있음. 특히 4분위와 5분위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함. 교육비는 여전히 재량적 지출로 분류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실질금액으로 보아도 보건 지출은 가구주가 2~30대인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실질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교육비 지출금액은 학령기 자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0~50대에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27> 소득분위별, 가구주연령대별 교육 및 보건 지출액 및 비중

- 교육비 지출 비중은 학령기 자녀 유무에 따라 매우 다를 것임. 실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금액을 살펴보아야 교육비 부담의 실질을 알 수 있을 것임
- 좌측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8세 이하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실질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 시기에 줄었다가 증가 추세에 있음.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우측 그래프는 17세 이하 가구원 존재할 때와 18세 이하 가구원이 존재할 때의 평균 교육비를 비교함. 18세 이하의 경우에 변동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음. 이는 18세의 경우 대학생의 학비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4-28> 학령기 가구원 존재 여부에 따른 교육비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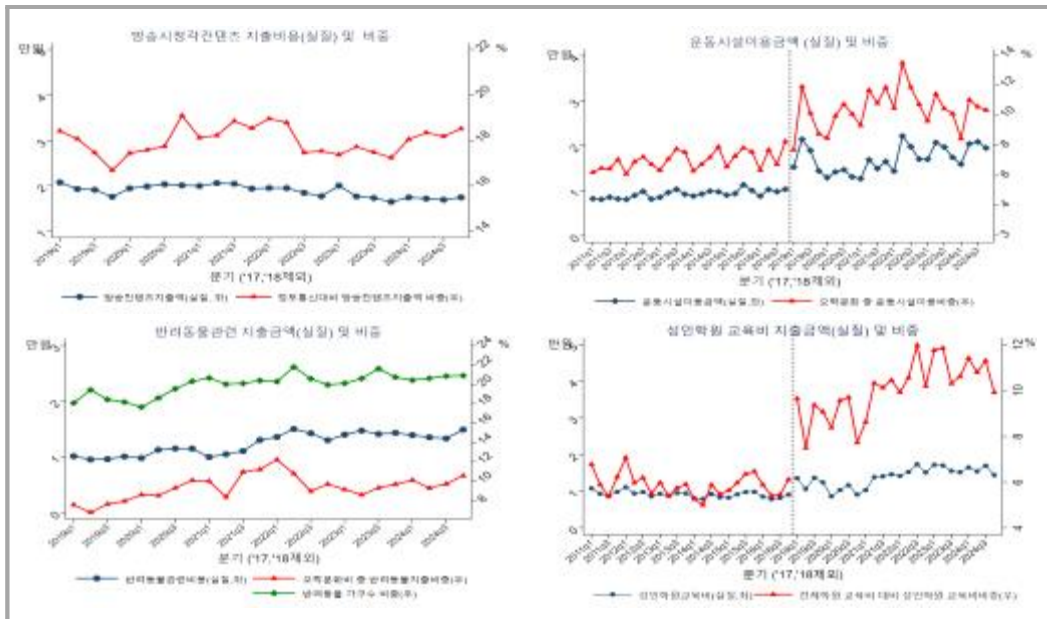
- 학령기의 연령을 17세까지로 할 것인지 18세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통계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함
 - UN·OECD·EU 등 국제기구는 청소년·청년을 대체로 15 - 24세 또는 15 - 29세로 정의하며, 아동 통계에서는 0 - 17세 기준을 많이 사용
 - 국내에서는 청소년기본법(9 - 24세), 청년기본법(19 - 34세), 고용통계(15 - 29세 청년) 등 연령 기준이 서로 다소 상이
 -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서도 부문별로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데, 아동청소년 일반 분류에서는 17세를 많이 사용하나 학습·역량 영역에서는 18세를 사용함
 - 각자의 통계적 목적에 따라 연령 구분 기분이 달라지므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나름대로 통계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목적이 중등교육 이하의 교육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17세 이하가 더 적정해 보임. 왜냐하면 18세는 일부 대학생의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어 계절성을 키울 뿐 아니라 가계동향에서 보고자 하는 중등교육 교육비를 과대 계상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표 4-4> 기관/조사별 학령기 상한 연령

구분	명칭/기준	상한 연령
UN, WHO	아동/청소년	17세
OECD	중등교육	17/18세
EU/Eurostat	Children	17세
청년기본법	청년	19~34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9~24세
아동청소년삶의질	아동청소년/학습	17세/18세

□ 최근 방송시청각콘텐츠¹¹⁾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방송시청각콘텐츠 실질 지출 비용은 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지출액 대비 비중은 18% 내외로 유지하고 있음
- 운동시설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락문화비 중 운동시설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
- 반려동물 가구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 초반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지출 비용도 계속 증가하여 오락문화비 중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중이 10% 수준임
- 성인의 자기 개발 등에 따른 학원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10년대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함. 전체 학원비 대비 성인학원 교육비의 비중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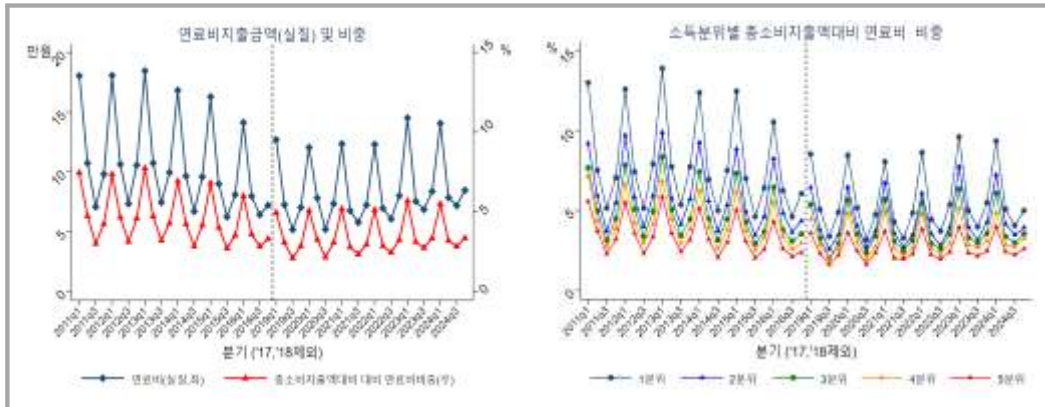
<그림 4-29> 방송콘텐츠, 운동시설, 반려동물, 성인교육비 지출액 및 비중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연료비 지출액에 대한 관심이 많음. 특히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연료비 실질 지출액은 201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섬. 총지출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1) 가계동향조사 2025년 개편 시 정보통신 부문에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이용 항목을 신설하여 2019년 이후 신분류 체계에서는 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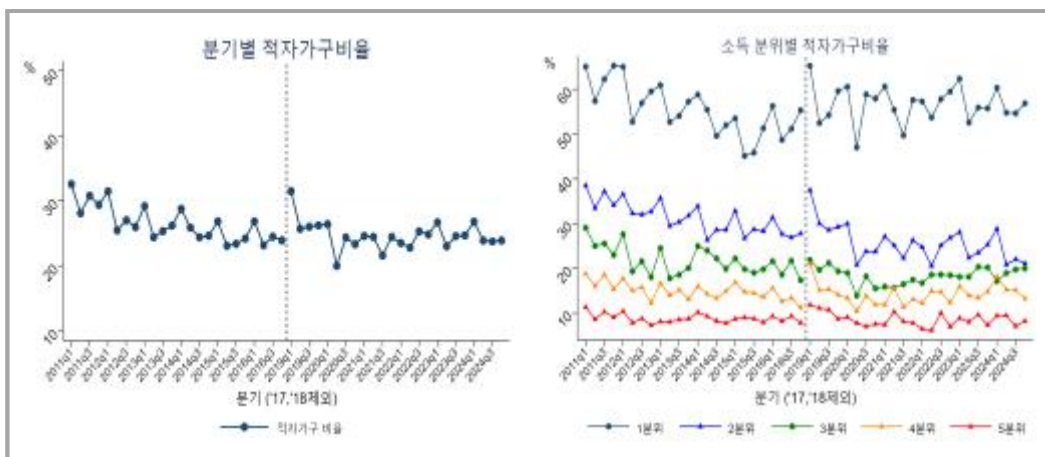
- 소득분위별로 보면 코로나 이후 1분위와 2분위에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변동성이 작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는 난방뿐 아니라 냉방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30> 연료비 지출액 및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비중

□ 아래 그래프는 적자가구¹²⁾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좌측은 전체 가구에 대한 적자가구 비율로 약간 하락추세에 있으며 20% 중반 수준에 있음
- 우측 그래프는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을 나타냄. 1분위 적자가구는 50~6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1~4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



<그림 4-31> 분기별,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12)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 0 인 가구를 의미함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지표를 검토하고, 작성 방법과 해석상의 유의점을 정리함. 주요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함
- 첫째, 소득지표와 소비지표는 상호보완적이며, 특히 소비지표는 복지 불평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함
 - 소득지표는 생산·분배 구조와 세제·사회보험 제도와의 연계성, 장기 시계열과 국제 비교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일시적 소득 충격과 측정오차, 가구 특성·지역 가격 차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
 - 반면 소비지표는 항상소득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계의 장기적 생활 수준을 잘 대변하며, 필수재·재량재 지출 구조, 정책에 따른 체감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 가능
- 둘째, 소비 분배지표로서 팔마비율의 활용 가치가 높음
 - 분석 결과, 소득·소비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매우 높은 상관계수와 부분결정계수를 보여, 분배 상태를 유사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시에 팔마비율은 상위 10%와 하위 40%의 점유율 비율이라는 단순 구조 덕분에 일반 국민·정책 담당자에게 직관적인 해석을 제공
 - 반면 5분위 배율은 상·하위 20%만을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체 분포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
 - 따라서 소득·소비 모두에서 지니계수를 기본 지표로 유지하되, 팔마비율을 보완지표로 병행하고, 5분위 배율은 ‘양극화 지표’라는 보조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셋째, 엔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작성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할 때 유용한 생활비

부담 지표가 될 수 있음

- 앵겔계수는 원래 저개발국·저소득층의 식료품 부담을 평가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필수재 비중의 장기 추세, 계층 간 소비구조 차이, 여가·문화지출 확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 재해석 가능
- 슈바베계수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 취약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전세·자가 등 한국 특유의 주택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의제주거비 산정 방식(전월세전환율 vs. 이자율)과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전세자금 대출 처리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넷째, 재별 지출 비중과 구조 변화·소비트렌드 지표는 거시경제와 사회구조 변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내구재 비중과 자동차 구입 지출은 경기 상황에 대한 가계의 기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서비스 비중 상승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
- 보건·교육·연료비 지출은 고령화, 저출산, 에너지 가격 변동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직결되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
- 방송·시청각 콘텐츠, 운동시설, 반려동물 관련 지출 등은 새로운 소비문화와 산업 구조 변화를 뒷받침하는 통계 기반이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향후 분배·복지 지표체계는 소득지표와 소비지표를 결합한 이중 축 (dual pillar)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소득지표는 생산·분배·조세·이전 구조 분석과 국제 비교에 계속 활용하되, 소비지표를 공식 통계체계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필요
 - 소득·소비 분포의 괴리
 - 식료품·주거비 등 필수재의 부담
 - 보건·교육비 등 구조적 소비 변화
 - 방송·시청각 콘텐츠, 반려동물 비용 등 문화·소비 트렌드 변화

□ 요약하면, 소비지표는 소득지표를 대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계의 실질 생활 수준과 복지 격차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필수적인 보완 축임을 이해할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비 분배지표, 앵겔·슈바베 계수, 재별 지출 비중 및 구조 변화 지표는 향후 공식 통계와 정책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출발점이며, 이후 보다 정교한 지표 개발과 국제 비교 연구로 확장 검토 필요

참고문헌

- 김대일. (2007). “불평등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30권(3), pp.77~102.
- 김대일.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노동경제논집*, 제38권(2), pp.22~58.
- 변준석. (2017). “소득분배지표 해외사례 연구”, pp.255~286.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윤기중. (1997).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 통계청. (2025).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 한국재정학회. (2024). “가계동향조사 지표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
- Attanasio, O.P. and Pistaferri, L. (2016). “Consumption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0(2), pp. 3-28.
- Cobham, A. & A. Sumner. (2013). *Is it all about the Tail? The Palma Measure of Income Inequality*. Working paper 343,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Palma, J.G. (2011). *Homogeneous middle vs. heterogeneous tail, and the end of the 'Inverted-U': The share of the rich is what it's all about*. Cambridge Working papers in Economics 1111, Cambridge.

Abstract**A Study on Developing Consumption-Related Indicator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Byun Jun-seok, Song Jung-hyun**

The economic welfare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is based on income but is ultimately realized through consumption. Income is the foundation and intermediate stage for welfare, whereas consumption represents the final outcome in which welfare is revealed. Nevertheless, official indicators describing households' economic conditions and distributional status have so far focused mainly on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discus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consumption-related indicators that can complement income-based indicators, using consumption expenditure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to propose concrete methods for constructing key consumption indicators.

First, drawing 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the life-cycle hypothesis, the study organizes the relationships among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and compares the respec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come-based and consumption-based indicators. It then use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o produce pilot estimates of representative consumption indicators, including consumption inequality measures (the consumption Gini coefficient, the consumption Palma ratio, and the consumption quintile share ratio), Engel coefficients (in narrow and broad definitions), the Schwabe coefficient, expenditure shares by commodity type, and the share of deficit households. In particular, for distributional indica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alma ratio exhibit very high correlation and explanatory power, whereas the quintile share ratio is more appropriately interpreted as an indicator of polarization.

The study further demonstrates that Engel and Schwabe coefficients can be constructed using both micro approaches (computing household-level ratios and then averaging) and macro approaches (ratios of aggregate amounts), and it summarizes the differences in results and interpretation between these two methods. It also discusses which expenditure items should be included or excluded when constructing these coefficients in light of recent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 supplements, eating-out expenditures, and imputed housing cost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various supplementary indicators that capture structural shifts and consumption trends, including expenditure shares on durable, semi-durable, and service items; health and education spending; use of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content; and expenditures related to fitness facilities and companion animals.

The analysis shows that consumption-based indicators provide a more detailed picture of households' actual living standards, structural changes, and the burden on vulnerable groups—dimensions that are difficult to capture with income-based indicators alone. The study concludes that,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future distributional and welfar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pillar indicator framework that combines income- and consumption-based measures in parallel, and that developing consumption indicators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stitutes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at direction. It is a problem that experts in various fields should approach with interest.

Key words: significance of consumption indicators, Palma ratio, Engel coefficient, Schwabe coefficient, durable goods share, changes in consumption trends.

● 연구진

- 변준석(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송정현(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12

가계동향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 관련 지표 작성

인 쇄 2026년 3월
발 행 2026년 3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